

제41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0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새만금개발청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3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새만금개발청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7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은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소관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의 대안 제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과 청장님들께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부 정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장마철로 인한 집중호우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송 지하철도 참사 등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신안산선과 노후정비계획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약 4조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내년 4월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통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인허가 지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에 불과하며 개통이 48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와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연의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4월 총선에서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인접 지역의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주민들에게 신안산선의 정상 개통을 약속하였고 지금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적기 개통을 위한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소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지난 4월 27일 시행되어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111개의 대상 지역 중에서 1기 신도시, 그중에서도 일부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기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외의 정비 대상 지역의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현장을 가 보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 동의서에 서명부터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더하여 1기 신도시 내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 대하여 주민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된 1기 신도시 내에서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규모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비구역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괄계획가, 이른바 MP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MP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권영세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위의 경우에는 상임위 성격으로 보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면면으로 볼 때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3개 부처의 업무보고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새만금개발청

(10시40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종오 위원 업무보고 전에 진행발언 하나……

○위원장 맹성규 예?

○윤종오 위원 진행발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윤종오 위원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25일 날 청문회 때 장관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금융위나 지자체, 법원, 경찰, LH 등 유관기관에 상설적으로 회의 체계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실장이나 단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박병석 단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지요?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그때 회의록이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다 답변하셨는데,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회의록은 없습니다. 회의 자체의 회의 내용은 있는데 회의록은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었는데 회의록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문회 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인 조치가……

○위원장 맹성규 윤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거예요?

○윤종오 위원 지난번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제대로 회의를 안 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고요. 또 회의를 했다면 했던 자료라도 제출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했던 자료라도 빨리 제출하세요.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필요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님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자료제출 요구는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관련 기관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했으면 줘야 할 텐데 아직 아무 자료도, 내용도 없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생활과 24시간 밀착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이자 SOC 확충 등 국가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상임위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투명화, 리츠 활성화 등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퇴근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3월 개통된 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하여 초광역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운행 확대와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 확충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K-패스와 한 번의 결제로 연계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MaaS 등 교통서비스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주도형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15개 신규 산단과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거점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도시 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한편 고속철도망과 간선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메가시티 구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저성장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24년 400억 불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실증에 본격 착수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도 상용화를 준비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건설, 교통, 물류, 항공 등 국토교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 규제 혁신과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입니다.

다섯째,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와 건설현장 교통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급발진, 화물차 불법 튜닝 등 취약 요소에 대한 맞춤형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 등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고, 지난 6월 25일 열렸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 조치 결과는 주택토지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관 진현환입니다.

제2차관 백원국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 문성요입니다.

국토도시실장 이상주입니다.

주택토지실장 김규철입니다.

교통물류실장 엄정희입니다.
항공정책실장 주종완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정희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입니다.
대변인 박지홍입니다.
건설국장 김상문입니다.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입니다.
도로국장 이우제입니다.
철도국장 윤진환입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김복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조직, 예산, 법령, 산하 공공기관 등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게 맞는 주택공급 확대로 국민들의 주거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지원하여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는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PF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생아 특례 대출, 실버스테이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신혼·출산 가구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11만 50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경매 시 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과 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리츠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개통된 GTX-A를 시작으로 GTX 시대를 본격 개막하겠습니다.

1기 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기 GTX 사업도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권 광역철도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방권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구미-경산 구간은 금년 하반기 중 개통하고 충청권 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등 GTX급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버스 중심의 단기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 교통결절점에 환승센터를 확충하고 광역버스 급행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와 M-DRT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수도권 중 교통 불편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광역교통 시설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광역교통 시설이 조기 확충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갈등조정 기구를 구성하는 등 광역교통시설의 공급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고 공정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확대한 K-패스와 함께 MaaS 시범 서비스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노

레일, 케이블카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 성장을 지원하여 초광역 경제권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일자리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대도시권을 4대 초광역 경제·생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하고 인허가 사전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15개소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캠퍼스 혁신파크는 스타트업, 연구소, 기업 등의 임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등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도 7월 중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도심 재구조화와 지역 생활거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지하화는 내년 1월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자체의 사업 제안을 토대로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등 도로 지하화 사업도 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도심 공간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뉴빌리지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빈집 정비와 주차난 해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초광역권 구현을 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을 본격 확충하고 방사형 순환망과 격자망 등 간선 도로망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역별 거점공항도 신속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외건설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하여 24년 400억 불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도급 사업에 집중된 해외건설 분야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UAM 수도권 실증에 본격 착수하고 상용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도 본격화하기 위해 레벨4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C-ITS 통신을 위한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산업을 첨단화하고 선진화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의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실증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사업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로봇배송 등 첨단·친환경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시설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하겠습니다. 공항시설 이용의 편의 제고와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국토교통산업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항공소비자의 불편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지자체 합동 단속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혁신과 지원으로 전통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임시운전자격,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등 버스업계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내륙 물류기지 현대화, 국제 물류거점 조성 등을 통해 물류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물류 취약 지역 지원 등 생활물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LCC 육성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술로 제작한 KTX-청룡 운행과 함께 간이역 등을 활용한 철도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교통 분야의 안전을 강화하여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하겠습니다.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공항관리 로드맵도 수립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비탈면, 교량 등 취약 구간에 대한 도로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교외 가설건축물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범정부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화물차의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급발진 사고 관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을 확대하는 등 교통안전 취약 분야별 맞춤형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청문회 주요 논의 내용과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략히 정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지난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이 적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월 10일 오늘부터 DTI 요건을 기존 60%에서 100%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는 7월 12일 국토부장관 주재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1차관 주재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기관별 협조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에서 피해 주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피해 주택의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난 7월 9일 지자체 회의를 개최해서 지자체별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추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전국 58개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경매 유예 연장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도 해당 내용을 법원 내부 커뮤니티에 게재하여 각 법원의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원활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3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국 여섯 곳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주변에 추가 전담창구 지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탁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신탁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의 주의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반영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주 내로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현황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피해자 전세대출 현황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금융 당국의 협조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당 안과 정부안의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피해자의 규모, 피해 주택의 낙찰예상가,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소요를 추계 중에 있습니다. 피해 주택별로 사례가 다양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추계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현금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문회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행복청장 김형렬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7년 착공 이래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통해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주택,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 중추시설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체계 개선, 자족기능

확충 등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도시를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하고 도시 건설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행복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장 강주엽입니다.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홍락입니다.

시설사업국장 최형욱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자료 7쪽의 핵심 추진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복청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을 목표로 다섯 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 건립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와 인근 지역 도시설계를 아우르는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가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총사업비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중추시설이 건립되는 도시 중심부 일대는 주변의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국가적인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가 주요 기능을 지원할 배후지역 조성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요 도로 확장과 BRT 전용도로 설치, 교량 신설 등을 추진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설치 방안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광역도로와 BRT 노선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를 구축하는 등 행복도시 광역권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셋째, 도시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첫 입주 대학인 공동캠퍼스를 개교하고 세종테크밸리에 앵커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을 순차적으로 조성·운영하고 2구역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술관 등 문화시설 유치, 휴양·체육 시설 조성 등 매력적인 문화·여가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연내 약 5000호의 주택을 착공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안전·치안 시설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건립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도시를 글로벌 도시모델로 조성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40 탄소중립 달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거버넌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하계U대회 개최에 협력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복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균형발전의 거점인 실질적 행정수도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개발청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새만금개발청은 10조 20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투자 유치 성과는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새만금을 적극 지원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새만금은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 투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새만금국가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하고 혜택을 집중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됨에 따라 급증한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단 3·7·8공구 매립 착공 시기도 1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새만금을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 급증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산업용지를 확대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기업 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원활한 공장 가동,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용·폐수 공동관로, 전력공급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근버스,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교통·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수변도시는 기업 지원 특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며, 수변도시 인근 지역의 개발 가속화를 위해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3대 허브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에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MICE 허브 구상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 추진 상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허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새만금개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희 차장입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태영 위원 오늘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전세사기 입법청문회에서 주로 제안되었던 많은 사안들이 성의 있게 점검되고 보고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때 저희가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들은 좀 두루뭉술하게 지나가고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 판단을 위한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 제공 필요’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지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이런 정도로 표현된 것이 아쉽고요.

또 ‘피해자의 전세대출, 신탁사기 현황 파악 중’도 또 이것을 임대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없어서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몇 차례 재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는 엇그저께 선순위 저당권 자료는 아직도 조사 중이다 또 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799건에 대한 신탁회사별 건수와 임대보증금 총액만 온 게 전부고 그래서 자료가, 그때 당시에 조속히 취합해서 보고해 주고 또 자료를 전달해 달라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좀 부실해서 그것을 촉구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아침에 경북 경산에서 택배 일을 하던 40대 여성분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해당 사항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분이 어느 택배회사 소속인지 정직원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지 못하다가 몇 번 채근을 받고서야 쿠팡CLS가 아닌 쿠팡 직고용 플렉서다 그 이상은 알아보기 어렵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로서는 생명이 관련된 것이고 또 택배 회사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또 상황 파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대외협력 담당자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기자 수준의 정보를 답변해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은 이번 폭우 택배노동자 실종 관련해서 그 사항과 경위를 바로 파악해서 오늘 이 회의 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택배 사고 당하신 분 관련되는 내용 가능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련 회사를 통해서 일단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망자의 신원에 관한 거라서 이게 뭐 그렇게……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그것 포함을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확인해서 한번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염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세사기 자료는 아마도 저희가 법률안을,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필요한 자료일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리고 아까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서, 아까 보고된 자료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신탁사기 예방 관련해서는 개정안을 7월 3일 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저희 부하고 법무부가 공동 소관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를 마치고 개정 방향에는 동의를 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내용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전 위원님.

○전용기 위원 화성정의 전용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자료를 좀 받아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GTX 시대라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부 핵심 사업으로 GTX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GTX가 연일 활용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계 교통망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GTX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냥 GTX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겠다

정도의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와 관련해서 연계 교통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GTX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6페이지에 보면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6배 이상의 운임요금을 내야 된다는 등 이동약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장애인연대에서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국토부 입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서미화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법안도 발의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을 담은 내용, 법안 내용은 어차피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올라오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그 법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이동권의 차별이 없는 지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추가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 위원님.

○정준호 위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희룡 장관 시절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발표를 했고요. 국토부가 그 뒤에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지만 아직까지 재개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담당부서 직원 공무원들이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승진을 대다수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두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중점 변경 의혹이 시작됐었는데 중점 변경안이 최초로 보고된 2022년 5월 달에 도로국장 역임하셨던 인물이 철도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현재 초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으로 영전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책임이 있는 인물은 본인이 스스로 용역 자료 삭제까지 지시했다고 시인했음에도 현재 승진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맡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2023년 7월 8일 자로 구성이 되었던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대응 TF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줄줄이 승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도로정책과에 근무했던 인력들의 승진 내역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응 TF 승진 인사 내역, 이 내용 일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최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서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일곱 분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주로 차량의 탑승자가 피해자였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그냥 길에 서 있던 평범한 시민들께

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치셨기 때문에 지금 큰 공포심도 느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7월 1일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앞으로 이런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관련되는 자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오전 질의는 12시 반경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박상우 장관님,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철도구간 도로 침수되고 있고 낙석사고도 있고 한데 운행 중단된 철도 운행 재개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오늘 아침 자로 호남선하고 일부 구간이 운행 중지됐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요. 재개 보고는 아직까지 제가 이 시간에 국회 출석 관계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도읍 위원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은 지금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하고 있는데 1·2차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 이유가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첫 번째 입찰에서는 아무 업체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또 재입찰 공고를 했을 때는 모 건설회사 두 군데가 컨소시엄을 조성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재입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가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컨소시엄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경쟁입찰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유찰이 됐다 이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대책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바로 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나 언론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업체수를 너무 제한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저희 내부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한번 의견도 걸러 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의 원칙의 예외를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재로서는 경쟁입찰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도읍 위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대책 수립 과정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믿어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견 공사 금액이 굉장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쟁입찰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설계·시공 입찰이 빨리 성사가 되어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 적기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 이주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이주대책 실시권은 국토교통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국토교통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부산시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인 부산시에 맡기지만 말고 실시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리고 보상법도 빨리 개정을 해서……

○김도읍 위원 일단 이주대책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도 연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면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용역 준공을 기다리지 않고 주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액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토지보상 절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가덕신공항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장관님, 지난 5월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표가 되고 지방은 빠졌어요. 지방이 빠진 이유는 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이 처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노후신도시로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 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1기 신도시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준비가 미리 시작이 되어서 있었고요. 법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추가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111개에 해당되는 신도시들은 준비가, 그러니까 준비 시작부터가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정한 하나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말은, 표현은

선도지구로 돼 있지만 그 지역에서의 선도지역이지 지역 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어느 지역이 먼저 가는 것이, 다른 지역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머지 지역들도 빨리 지자체 차원의, 또 저희와 협조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런 필요한 조치들을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아시다시피 노후도시 정비·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하고 지방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지방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기본방침을 정할 때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거는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재건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물론 사업성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화된 기본방침은 만들어 줘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김도읍 위원** 그만큼 연구하고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전폭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장관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진일보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 그거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상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못 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항력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민홍철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안 했습니다.

○**민홍철 위원** 하여튼 그게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보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완을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 때 보니까 재정소요 추산이라든지 채권매입 최소 지원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재정 투입이나 최소한의 지원금액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터인데 그 방법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소위 때 자세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소위 때 논의를 같이 하시면 될 터인데요 가능하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똑같은 실질적인 그거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재정을 아껴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권의 보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전세사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2023년 8월에 아마 부산 지역이나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HUG로부터 보증을 받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 정보를 모르고요. 집주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HUG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서 보증 취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합계 세대수가 468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 임대인 수는 22명.

1차적으로 1심법원은 HUG가 보증을 썼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HUG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토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주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사실은 HUG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만 저희가 주무부처로서의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증을 믿고, 임차인은 임대인과 HUG가 맺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니까 모든 국민이 믿을 거 아닙니까?

○민홍철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 국토부 지도·지휘 부처로서……

○민홍철 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보증이 들어오면 임차인에게 제대로 된 서류 이것을 알려 줄 의무가 있다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다음에 HUG를 할 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때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 국가철도망계획은 5년 단위로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이번 5차 철도망계획은 원래는 26년 7월에 발표돼야 하는데 왜 25년, 1년을 앞당겨서 25년에 발표하기로 이렇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여러 가지 철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당겨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 습니다.

○민홍철 위원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다만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보통 각 차수별로 철도계획을 세울 때 한 90조에서 100조 정도 재정이 투입되는 식으로 계획을 하지요. 그런데 이번 5차 철도계획 에도 한 90조 정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 제가 보니까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약 40조 내지 50조 투입되는 거지요. 2차관님, 그렇 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런데 나머지 계획 중에 GTX-D·E·F 신설할 계획을 해서 거기에 38조 600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사업과 GTX-D·E·F를 합치면 거의 90조 정도 받게 됩니다. 나머지 10조를 가지고 이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역 광 역철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시도에서 필요한 광역철도를 60건 정도를 신청했는데 5차 계획에 몇 개 반영할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기존 계획처럼 그런 규모로 담아 간다면 담을 수 있는 룬이……

○민홍철 위원 그래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 광역철도, 광역 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 동남권 부울경의 광역교통체계는 대광법에 의 해서 광역교통청을 신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광역철도 이것을 수도권 투자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역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5차 철도계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 위주로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큰 뜻에 동의합니 다. 그래서 5차 계획에 있어서 사실 지금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적인 제일 최우선 과제로 돼 있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광역거점을 만드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그 광역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광역 교통수단을

적절하게 갖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위원님 대부분이,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현안이 관련되는데.

그러니까 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재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계획인데 왜 투자재원을 다 못 답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 부분은 재정당국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냥 말로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에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국토위 회의에 훔날리는 꽃잎을 소개하는 이유는 국가 운영에서 세금은 꽃잎 처럼 넓게 그리고 얇게 걸어서 국민의 주거를 편안하게 지켜 줘야 된다는 조언을 부동산 정책에도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었습니다. 세원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세율은 얇게 한다는 취지에서 세금과 부동산 주제로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서울과 노후도시 정비, 지금 수도권에서 공사비 그리고 금융비용으로 재건축이 멈춰 선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얼마나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개수로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사비가 5년간에 한 30% 이상 상승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이렇게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데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복결복 부담을 지게 하는 재조환은 저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조환법에 대한 장관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얼마 전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부터 재건축은 시장의 힘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거 같으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집값이 오를까 봐 재건축을 규제를 하고 규제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재건축을 지켜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들이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장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재초환은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할 때,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가격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억지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폐지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폐지하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보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글쎄요, 만약에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이런 규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 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완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기본적으로 2018년 이후에 재건축부담금이 실제 납부된 사례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김은혜 위원**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곧 재개되게 돼 있는데요. 재개되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은혜 위원** 공사비가 원래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고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재초환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명백히 새로운 주택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중과세, 즉 재산세를 내도 재초환을 다시 부과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법 폐지, 즉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토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재건축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안 되는 3대 요인 중의 하나가 공사비, 말씀하신 금리 같은 부담금입니다. 어떤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적정한 용적률을 보장한다든지 해서 수익성은 좀 늘리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통합재건축 공사를 하면 실증적으로 10% 이상의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외에 또 불필요한 건축 규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장치들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12조 원의 미래도시펀드를 발표하셨던데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건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해서 물리적인 공사비뿐만 아니고 금융비용을 줄여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또 하나의 걸림돌이 기부채납 비율입니다. 이게 시행령에 상한이 명시가 되는데요.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은 오히려 도정법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공공기여,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조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실행 수단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또 다른 표적과세가 종부세입니다. 국토부는 조세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직결되는 만큼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보다 표적을 노리는 징벌과세의 경우에는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 원리와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되 고가 주택의 자산가에 대한 중과, 즉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형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함께 일원화하면서 누진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종부세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무장관은 아닙니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또 부동산 정책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 비슷하게 도입된 측면이 강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라든지 지방재정을 보전한다든지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세정 방식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종부세 수입이 각 지자체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할 때 지자체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원 확보 방안에서 우리가 초과수익이라는 법리에 맞지 않는 단어로 해서 비현실적 우려를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재건축부담금 폐지, 종부세 폐지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재건축 지원 그리고 교통과 인프라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염태영 위원 저는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계속 사회문제화돼서 관련되는 기업들과 또 관계기관, 정부 부처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작성한 적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2021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과로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5월 28일 택배노동자 정슬기 씨가 로켓배송 일을 하는 노동자였는데 이분이 10시간 넘게 일하고 그리고 70시간 일을 하고 이런 결과로 심실세동, 심근경색 의증,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글썄요, 지금 책임 문제를 특정한 누구 개인이나 그런 쪽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매영업 이런 쪽에서 온라인 거래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급격히 바뀌는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에 충분한 대비를 못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태영 위원** 사회적 합의정신에 기초해서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그때 합의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기업들이 제대로 이와 관련된 규칙들이나 협의 내용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등록업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저희가 지금 합의에 참여한 회사 외에 쿠팡을 포함해서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택배터미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합의 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은 쿠팡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CLS를 통해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에 소속되게 해서 어떻게 보면 특고 형태로 해서 쿠팡이 모기업의 책임을 최대한 빠져나가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초해서 위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염태영 위원** 그런데 쿠팡CLS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아마 장관님이 직접 이걸 하시지는 않으니까 바로 답변 못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모든 택배사들이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 일체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염태영 위원** 이 쿠팡CLS가 제출한 서류에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국토부장관은 즉각 쿠팡CLS의 택배서비스사업자 허가 취소해야 되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법령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령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 표준계약서 외에 또 어떤 제도들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느냐 하면, 쿠팡CLS는 클렌징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염태영 위원 클렌징 제도는 생활물류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있는 악랄한 계약조건입니다. 생활물류법에서 6년 계약갱신청구권 또 엄격한 계약해지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이 쿠팡CLS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부속합의서 계약조항에 클렌징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구역회수 이걸 마음대로 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과로를 유발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속합의서 계약 조항의 2회전 배송 미수행이라든지 새벽 7시 전에 택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역을 회수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이런 조항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택배보조원들을 알바로 쓰기도 하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서도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CLS는 ‘우리는 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작동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에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느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해서 그 토대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로 전환이 되는 게 굉장히 급하게 우리 사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되는 인프라들이 많이 미비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 택배사에 대한 감독은 하지만 관련되는 고용노동부나 또는 공정위 같은 관계 부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계약서 정신을 정확히 지키고 그와 관련돼서 등록 허가 서류에 위반되는 사안들이 발견되거나 또 표준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안들이 현장에 있거나 이래서, 과로사로 촉발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쿠팡CLS의 이와 같은 형태는 계속되고 있다 또 고용 형태를 지극히 책임 회피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새벽 배송 또 야간 배송을 통해서 노동강도가 좀 더 세지는 데 대해서 무방비로 있다, 이런 것들은 꼭 방지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새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새벽 배송이라든지 야간 배송이 늘어나면서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우리 건설현장 근로자나 교통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위원님 질의 취지 잘 받아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저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라든지 오송 지하철도 참사 이런 무수히 많은 목숨을 잃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

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택배 물류, 전세사기에 대한 희생자가 더 나타나지 않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희정 위원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물어볼 게 많은데 질의를 못 하겠어요. 멘붕 상태가 오거든요.

오늘은 2024년 7월 10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2024년 7월 10일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님, 양 차관님 그리고 다섯 분의 실장님, 열여덟 분의 국장님 배석자 여러 분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기조실장의. 순서대로 합니다. 광역철도 나오고 고속도로 나오고 지방 국지도 나오고 초광역권 육성 사업 나오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나오고,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단체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다 나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수백 개의 자치단체가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전북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14개가 나오는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제가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지.....

장관님,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국토 아닙니까? 버렸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죄송합니다. 이게 짧은 보고서에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춘석 위원 (책상을 내리치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새만금의 공항 편에 이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200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하는 조항 딱 하나예요. 이것 지방자치단체명으로도 나오지 않고 딱 하나 나오는데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 국지도, 초광역권 육성 사업,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어느 곳 한 줄에도 전북도, 전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강원도는 있는가 봤어. 그랬더니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뭇 하는 겁니까?

이 업무보고 보면..... 아니,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도 없었으면 그것도 지적 못 하겠지만,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1년간 사업하는데 전라북도 사업은 단 1개도 없고 단 하나도

않겠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부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 저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이 아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3대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단 한 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부가 구상하는 초광역권, 권역별 광역철도 추진계획에도 다 빠지고 대광법에도 빠지고 초메가시티 조성에도 빠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니깐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뭔가 대책이 나와요. 그런데 전북도는 단 1개도 없어요. 이것 완전히 버린 자식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까, 땅 파서 국토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방자치 자립도도 꼴찌 GRDP도 꼴찌 다 꼴찌니까, 너네는 꼴찌니까, 버린 자식입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 우리가 할 때는 너네는 어느 것도 포함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쪽팔려서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오늘 내가 앓고 좀 점잖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4선 의원 되어 가지고 와서 지역 얘기하면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그 많은 사업들이 수백 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하나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버젓이 계신 분들이 이것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라고 제출하고.

그러면 전라북도 출신의 국회의원은 앉아서 이걸 보는데 ‘아, 우리 전라북도는 잘살고 먹고살 만하니까 다 뺐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4대 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잘 챙기고 있고요.

○**이춘석 위원** 아니, 다 누락됐어요, 이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라북도지사님하고도 늘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라북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춘석 위원**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지역 더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

○**이춘석 위원** 앞으로 지방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이런 부분

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국토부장관님 차관님 실국장님들 계실 때 저하고 만나는 2년 동안 서로 불편한 관계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시고 뒤에 계신 실국장님도 명심해서, 국토교통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춘석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약속하신 대로 잘 정리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처 소상히 못 챙긴 불찰을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4+3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이, 그것도 아주 좁은 지역도 아니고 큰 중요한 새만금하고 또 전주 혁신도시도 있고 한 이 지역이 저희 기본 시각에 누락될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소홀했던 것 사과드리고, 챙겨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6월 19일 날 정부에서 저출생 추세를 한번 반전시켜 보겠다는 대책 발표를 하실 때 같이 동석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정재 위원 아마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 그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이나 또 양육이나 주거 문제를 핵심 분야로 그때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주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 이 부분만큼은 주택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 이번 대책들을 지원 방안을 냈는데 이게 사실 주택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한층 더 접근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문가들은 한계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 보셨지요, 여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정재 위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소득기준을 2억 원까지 완화하고 25년부터는 2억 5000까지로 완화를 해서 이제는 사실상 소득 제한 없이 아이만 낳으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시중보다 아주 싼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좋은데 이렇게 해 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전 부처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부분이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저리의 정책자금의 대출 한도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고 금리도 좀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실적을 보니까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일단 아기를 낳아야 되고요, 출산 조건이 있고. 또 순자산이나 주택의 연면적에 관한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한 3조 원 정도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그래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서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저출생의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인데 늘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의 정도는 우려는 하고 저희들이 조심해서 보고는 있으나 이게 그렇게 치명적인 큰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김정재 위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만큼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자세한 내역은 다 한번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팩트는 뭐냐 하면 지난 1월 29일 이후에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지금 젊은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혹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면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는데 데이터로 제출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정재 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또다시 결국 고가 아파트로 밀어 올리기를 해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 공급 문제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건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역차별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청약 관련해서 신혼·출산 가구의 특공을 확대하고 또 결혼 전에 청약 당첨이 된 이력도 제로베이스해서 결혼하면 다시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 가구가 아닌 그런 가구의 청약 가입자들 ‘내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내 당첨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것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도 정책 수립할 때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물량을 놓고 역차별받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사실은 이 혜택이 공공분양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공분양의 공급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좀 줄지 몰라도 물량의 수치는 40대 이상

의 다른 분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 또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그리고 지금 방금 물량 말씀하신 게 어떻게 늘고 과연 영향이, 물론 영향이 1~2%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답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두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결국은 지금 주택의 수요 공급이 불균형,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공급 대란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규모를 보면 작년 동기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18%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늘어나도 시원철을 판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장관님의 개인의 잘못이나 정책 실패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또 공사비도 인상이 되고 있고 또 PF 부실 여파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작년 연말에 취임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하고 지금 세 가지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인 LH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H공사가 순살 아파트라든지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제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착공 물량도 많이 줄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한준 사장에게 여쭙보시면 아마 각오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빨리할 수 있는, 도심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신축 매입약정의 형태로 해서 한 10만 호 정도를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몇만 호 가구 정도가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착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손톱 밑의 가시까지 다 찾아서 해소하는 그러한 디테일한 대책들을 지난달에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름, 어떤 정부든지 국민을 해하려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때도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사실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플러스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집중을 해서 가지고 정책 기조도 이쪽으로, 지금 수요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요. 그래서

공급 쪽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서 가지고 균형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 경기 용인시를 손명수입니다.

저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고 오늘 국토부에서도 전향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안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도와 정책이 당초의 의도와 다르게 굉장히 악용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분이 지금 현재 약 1만 8000명 이상,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손명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지원법 3조 2항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분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사기거든요. 이 규모가 피해자로 확정된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손명수 위원 지금 보증사고 건수가 금년 1/4분기까지만 해도 2만 6000건 이상입니다. 피해자로 확정된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액수도 훨씬 크고요. 이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제도로,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사실상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고 세입자들은 월세보다는 좀 싸니까 목돈을 만들어서 집을 구입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금용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왔지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하려면 전세자금이 사실은 내 돈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내 돈을 모아서 결국은 불려서 집을 사는 거지요. 이게 지금 현재 1000조가 훨씬 넘습니다. 전세 비중은 95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세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제도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사실 내 돈으로 전세자금을 대부분 마련을 했고 빌리는 경우에도 대부분 집안에서 좀 지원을 받는다가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의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한 건데 2008년 이전까지 사실상 거의 그렇게, 전세자금이 거의 다 내 돈이었지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2009년부터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전세대출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없는 외국의 경우로 보면 은행에서 월세를 대출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사실상. 그렇겠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사실? 은행에서 월세를 어떻게 대출해 주겠어요? 당연히 대출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또 보증을 해 줍니다, HUG나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보증을 해 주니까 대출 안 해 줄 이유가 없지요. 은행은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점점 확대가 돼 가지고 2013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전에는 한 80% 이렇게 하다가 점점 늘리고 2013년에 전세금안심대출을 해 가지고 100%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고 더구나 HUG에서 임대인 대신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공적 프로그램까지 만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세요.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또 HUG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보증해 주고 집주인은 폐일 염려가 없고 세입자도 폐일 염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세입자도 보호하고. 이런 좋은 의도로 정책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13년도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도 도입으로 준공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7년도에 이 보증금 반환하는 비율을 100%로 확대를 합니다, 그전에는 70%에서 시작을 했다가. 17년도에 이런 100% 보증을 한 이후로, 15년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하더니 17년 이후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나지요. 23년도에는 거의 2만 건의 사고가 생깁니다. HUG는 7조 5000억 정도를 변제를 해 주고 실제로 회수한 것은 1조 7000억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보십시오. 국토부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반환금 보증제도까지 만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깡통전세를, 건축업자가 집을 대량으로 지었는데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 같은 것 안 팔리니까 전세로 다 돌리고 그것을 HUG는 보증을 해 주고, 튀어 버립니다. 세입자도 물론 손해는 안 봐요, HUG에서 다 물어 주니까. 결국은 국가가 지금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HUG는 그 결과 작년에만 거의 4조 가까이 손실이 나고, 국가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좋은 뜻으로 도입한 제도가 세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전셋값이 오를 때 저희가 전통적으로 갑자기 전셋집의 공급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고 또 그게 폐이지 않도록 보증 만들어 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꼭 전세대책의 주요 아이টে็ม으로 해 오던 요소였는데 사실은 전세가격이 급락하는 또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거꾸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생겨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HUG가 엄청난 돈의 대위변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HUG가 아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몇 년째 D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신문에 나온 것처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얼마 전에 낫췄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정말 굉장히 복잡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손명수 위원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예, 하세요.

○손명수 위원 그래서요 사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구제를 해 주고 이렇게 하기로 다 합의를 했으니까 실질적인 방안을 내주시고요.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이런 제도가 악용돼서 피해자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국가가 사기를 당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사기꾼들에게 판을 깔아 준 결과가 됐거든요. 누가 봐도 그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허위 서류 내 가지고 보증받고 임차인들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이것 다 보증된다’ 해서 세주고 넘기고 튀어 버리고 이게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이것은 당연히 뭐 국토부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정책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책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이미 이게 검증이 됐잖아요, 악용되고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완 대책 또는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런 악성 전세사기범이나 주변에 이에 동조 또는 가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형에 처하는 쪽으로 지금 검찰에서 아마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제도 자체를 좀 고쳐야 됩니다. 보증제도 자체를 고치는 것,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좀 더 롱 텀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다 자기 돈 가지고 보증금을 냈는데 지금은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내기에 액수가 너무 커져 버려서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사실은 홍길동 씨한테 세를 사는 것 같지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같은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확대를 하면서도 지금은 서민층뿐만 아니고 중산층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산층형 장기임대주택을 제도화해 보자 하는 그런 장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전세를 없앤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그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대안적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어쨌든 이 보증제도는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반환금 보증제도 이게 있는 한 이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17일 날 저희가 HUG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담아 오도록 그렇게 국토부에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전의 마지막 질의로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본질의하기에 앞서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의 지역구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저도 지역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국토부의 업무보고가 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울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책상을 친다든가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한 차례만 있었으면 저도 굳이 발언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자제하고 또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조심해야겠습니다만 비속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선언적으로라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별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공감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서로 간에 주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본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 유찰되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공고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잘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여러 요소에서 지적하시는 개선 사항, 개선 방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간이라든지 또 참여 업체의 수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요. 벌써 업계 간담회도 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했고, 다음 주 이번 주에도 저희 내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김희정 위원** 말씀 중에 좀 그런데 기간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러니까 개항 기간이 아니고 공사의 법률적인 준공 기간……

○**김희정 위원** 아니, 이것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29년 개항 목표는 흔들림이 없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개항은 29년 틀림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 방안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서 재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왜냐하면 첫 번째 유찰되고 두 번째 바로 재공모하는 기간에는 시간을 변경 없이 또 조건을 변경 없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찰될 게 거의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토부가 아마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심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 조건이나 이런 재공고의 시점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 말씀하신 29년 개항 목표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업계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마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계속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이어서 이제 시행계획까지 다 마련이 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17페이지에 ‘4대 초광역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제가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4+3, 4대 광역권하고 자치권 3개가 기본 구상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전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업이 있습니다, 메가시티 사업이라고. 차별점이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크게 이론적으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만 저희는 지난 정부보다 광역권 안에서 거점의 역할을 강조하고요 또 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권 내에 고속교통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에만 GTX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권에는 지역명을 따서 CTX, 부울경권도 그와 같은 광역권 내를 초고속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통망에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미 좌초됐던 과거의 정부 정책과 이름만 바꾼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거의 메가시티 논의는 상당히 공무원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 간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권한 위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 간의 권한 위임이나 이런 게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연계가 되다 보니 당연한 거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나의 생활권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나의 이동권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리고 도시 간의 기능이 어떻게 연계돼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초광역 경제권 관련해서 설명회를, 물론 1차 단계니까 그렇겠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설명회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역 단위별로 설명회 개최 등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들이 제5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작업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이 지난 정부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유의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진일보하고 좀 더 효과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거나 지역 여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견 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와 연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 용역 진행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희정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연말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1월 달인가……

○김희정 위원 확실합니까? 11월에 나오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11월 달이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걸 보고 2차 이전 계획 발표할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스케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장관님께서 이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고 2차 이전 계획 발표 어떻게 할지 올 안에 있을 로드맵을 머릿속에 안 가지고 있으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지금 이 순간 탁 비쳐지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제가 11월 달이라는 걸 제 머릿속에 넣었는데, 확인하고 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정 위원 노무현 정부 초기 2003년 처음 구상 발표된 이후에 지금도 굳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수치들이 지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 부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역 경쟁력이나 총 고용량이 상당히 증가한 이런 수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인데 안타깝게 매번 선거 때마다, 특히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참 민망합니다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선거 때마다 이것을 얘기를 했다가 그 뒤로 논의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돼서 국토부의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아주 큰일입니다. 그냥 누구 마음대로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1차 이전 때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이 업무를 제 손으로 직접 했던 담당 국장이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기관은 몇 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 세수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서로 합의도 되고 또 협상도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 결과가 아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서 서로 간에 결심할 건 결심하고 또 협상할 건 협상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장관님, 강원 원주율의 송기현 위원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참 반갑게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 참 다행입니다. 특히 DTI 조건 완화 같은 내용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으로 또 청문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책이 계속 나와 주기를 바라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그것이 철저히 보고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장관님께서 책임지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특히 경공매 유예 같은 경우에 법원과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법원의 조직 특성상 각각 개별 법원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되는지는 또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각급 법원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해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독려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송기현 위원** 다만 오늘 좋은 대책이 많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 또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 방안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요건 완화, 두 가지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 건 다행인데 의무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송기현 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또 하나는 처벌하는 것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은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도와드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생겨서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제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여기 공직자들도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다시 또 유예가 됐어요. 전월세신고제가 사실은 깡통전세나 이중전세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발생해 있는 피해를 빨리 구제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개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손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보증제도라든지 또는 거래 안전성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반 장치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까지 마련해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오늘도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한 재산의 경우에는 만약 등기부 자체에 안 나오면, 신탁이라는 제도가 법조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법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등기부에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속하게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중개인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전월세신고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21년도에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또 1년 유예하면서 4년째 유예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월세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하면 그것이 공개가 됨으로써 임차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4년 동안 계속 유예된다는 것은 이것에 필요한 준비를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준비가 아직 미비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정부가 바뀌든 어쨌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이게 동전의 양면인 측면이 있어서요.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고 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를, 유예라는 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장치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서 양쪽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과도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과도한 건지 과도하지 않은 건지는. 실제로 몇만 명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재산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분들이 그 정도 부담하는 것이 과연 과도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을 때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중요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당연히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응했을 경우에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조차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가 앞으로 시행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방치될 순 없잖아요.

전월세 제도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약간 위협할 수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송기현 위원 그런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주거 안정성에 꽤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월세를 두세 번 못 내 가지고 쫓겨나는 이런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제도가 사실 전세제도예요. 전세기간 동안에는 주거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시행될 때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해 주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4년째 유예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유예되지 않도록 1년 안에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는데 위원님 지적을 되새겨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1년 후에 다시 또 유예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폭우 피해 때문에 세 분이나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특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우를 앞두고, 지난번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에서 관리 공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돼 있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만 어제 회의를 하셨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오 위원 부랴부랴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바쁜 가운데 이렇게 17개 광역시도 과장들을 모아서 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진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또 항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수긍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지원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많은 돈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번에 법 개정할 때 그것도 같이 쳐다볼 테고요. 다만 일선 지자체가 나서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일손이 달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렇지요. 일손 달리는 부분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렇게 개정안을 하나 내놨거든요. 같이 상의를 잘해서 대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울산에 북항 에너지저장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체불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장비비가 한 6억 1000만 원, 소방자재 등 자재비가 약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그 하청업체는 이미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서 발주했는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탄 회사가 아니고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지분이 52.4% 있고 나머지는 SK가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하청업체는 은진개발이라는 곳인데 부도를 내고 파산 신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 착공해서 9월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것 공공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입니까? 장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당 공사를 어디서 하는지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
다마는……

○윤종오 위원 일단 석유공사가 주 발주처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석유공사가 주 발주면 일종의 공공 공사라고 간주할 수 있겠
습니다.

○윤종오 위원 석유공사가 SK가스하고 합작을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든 거지요. 이게 코
리아에너지터미널이라는 법인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SPC가……

○윤종오 위원 SPC 법인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이럴 때 공공으로 봅니까, 공공으로 보
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특별한 실익이 없어서 그게 공공이나 민간이나 굳이 나누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실 장비 임대료를 못 받아서 이분들이 20명
정도 저희 사무실에 몰려오셔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가셨어요. 소방과 관련된 자재 이
런 것들을 납품해서 못 받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임금은 못 받게 되면 체불하면 바로 노
동부에서 제재를 받고 구속되고 이러니까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지급하는데, 사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거기에 장비를 빌려줬다지만 자기가 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걸 체불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전체 사업비 규모가 616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체불된 게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안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아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일단 건설기계법
22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 원청과 하청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 여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제
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 이행 안 했어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34조 9항의 전자조
달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공공 공사일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데 민간으로 보고 사실 안 했다고 보
는 것이지요. 이것만 했다 치더라도 임금이나 대여료, 자재비 이런 것들을 이용이나 전용
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이 딱 데로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만 잘했다손 치
더라도 체불도 안 생겼을 거고 불법 하도급도 없었을 테고 자재비 착복도 없었을 테고
또 부실 시공도 안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주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 현장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련되는 개정법률안이 아마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종료로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되살려서 입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
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시겠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사실 이 관련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했

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윤종오 위원 하여튼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리고 또 작은 회사는 파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고, 제도는 만들어 놔으나 제도를 어기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을 만들 건 법을 만들고 단속할 건 단속하고, 이 건은 따로 한번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일단 10억 이것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국토부에서 석유공사 대우건설 부르서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억 해결할 수 있도록 누가 좀, 어느 부서가 이 담당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건설국장 소관인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 고용노동부나 공정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관련되는 사건을 처리합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어디어디 협업을 할지 한번 하셔 가지고 했던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필요하면 저도 한번 같이 모셔서 물어볼 건 물어볼 텐데, 10억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노동자들이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관심 가진 사항은 제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질의 주신 사항 중에,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도 제가 답을 좀 잘 못 드린 것 중에서 꼭 답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수시로 무슨 TF를, 회의를 하느냐 그런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윤종오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 부에 그 부처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파견 직원들하고 늘 같이 한 팀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청문회 계기로 상위급으로 올려서 차관님이 어제 회의도 했고요. 필요하다면 또 그런 회의를 수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여하튼 이것 10억 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6000억 원이 넘는 공사 중에 10억 가지고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준 위원 경기 광주시을 출신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적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소소한 질의를 몇 개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이고 또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안태준 위원 그런 면에서 아까 보고한 청문회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일면 진일보한 면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저번에 제가 청문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시피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 보고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건물 전체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되게 잘하고 계시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청문회 때 제가 이 법을 입법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입법을 들어갔더니 이미 다른 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부처에서도 의견을 후딱 주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부처 간에 조정을 잘해서 빨리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 전에도 국토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8일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오늘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되게 죄송하지만 소소한 내용입니다. PPT 한번 보시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렇게 해서 이걸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바람에 공인중개사가 뭘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것 안 내 버리면……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확인 서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 전에 없다가 개정 후에 임대차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안 치고 특이사항에다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음’ 쓰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효가 없는 조치라는 생각이고, 노력은 하셨지만 실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세대확인증을 떼면,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60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원래 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유예를 해 주셨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노력은 하셨지만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죄송하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계속 지적을 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그런 지적 달게 받고, 얼마든지 많이 해 주십시오.

○안태준 위원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써 가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아니, 다 하게 돼 있는데, 확인하게 돼 있는데 그럼

에도 당신들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공인중개사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입장을 들어 봤어요. 제가 실명 확인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많이 안 읽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나 밑을 보면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임대인의 의무로 규정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지적인데, 사실 지금 주택 매매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그걸 다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한테, 물론 업무가 늘어난다고 뭐라 할 수는 있겠지만 신고하게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물론 유예 조치부터 빨리 풀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신고하게 하면 이런 조치들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선순위 채권자들 같은 경우, 선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 경공매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계처리를 해 주면서 권장도 해 주고 전세대금의 잔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기에 보증보험 그것 한번 띄워 보세요.

제가 보증보험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아까 손명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상당 부분 많이 정책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나면, 저기 윗줄을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해야 함' 이렇게 해서 은행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상계처리만 믿고 경공매를 받아요. 받고 났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빌려 간 전세자금 갚아' 이렇게 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다 갚으신 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소한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이걸 어떤 정책을 내서 구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상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센터 관련해서 좀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경기도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에서도 구체적으로 도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LH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지금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LH를? 그러면 LH도 현황 파악도 할 겸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소한 세입자들의 입장들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아주 상세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세 쪽지의 질의 주셨는데 우선 순서 관계없이 보증금과 낙찰금 상계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지금 서울보증보험에 한해서, 다른 보증하고 다르게 서울보증보험은 거기에다 질권 설정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법리적으로 좀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합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지금 금융당국하고 협의해서 SGI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공인중개사한테 의무를 줘 봐야 그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고 책임만 심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건은 저희가 입법적으로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장관이 되고 나서 새로 알았는데 정부기관 안에 권익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국민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이런 쪽의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아, 권익보호위원회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권익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역할이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잘못하면 엄청난 또 다른 처벌이나 형사법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써 또 다른 법률을, 양해를 좀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 확대 지적 사항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저희가 낸 안대로 된다고 그러면 LH가 더 적극적으로 경공매해야 되고 또 피해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대전 중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대전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어젯밤에 폭우가 많이 내렸지요? 그래서 경부선·호남선이 중지되고 해서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그 폭우 때문에 바쁘실 텐데 또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전국에 반지하 주택이 총 몇 가구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국에 반지하 주택이 한 30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주로 수도권이고 대도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위원 30만 7000 가구 정도 되지요? 이것도 2020년 통계예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용갑 위원 거기에는 수도권이 한 96% 정도 되고 여기에 50대 이상 고령이 64%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월세 형태가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연령대 또 경제적으로나 주거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반지하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혹시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일가족 참변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때 정부에서는 반지하 등 주거 취약가구의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예방 정책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정책과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반지하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다른 지상부 주택으로 옮겨 드리는 그런 반지하 매입 사업이 큰 축이 하나 있고요.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다음에 LH나 SH 같은 데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 중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매입할 필요 없이 이미 LH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일종의 소개라 그럴까요, 그 지하에 계신 분들을 주거 상향을 시켜서 위층으로 이사시켜 드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을 일방에서 하고 또는 LH 등이 가지고 있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층으로 옮겨 드리는 사업을,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 반지하 주택이 침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창문 앞에 가면 침수 차단막이 있습니다. 막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해 드린다든지 혹은 지하에 침수가 일어났을 때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경보장치를 단다든지 하는 장치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서울시의 관악구를 가 봤는데요,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구청장님은 자기 관내에서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5호 1가구제로 해서, 그러니까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다섯 가구를 한데 묶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전화도 해 보고 해서 가 보기도 하는 일종의 그런 장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박용갑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했던 그런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적은 매입 실적이 SH 경우에는 2642호가 있고요, LH는 추가로 매입한 것은 없다고 그러합니다. 작년에 아마 LH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면서 매입 가격을 충분히 책정하지 못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존에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위층으로 상향 이동시켰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전체 다 이동을 시켰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LH 공공임대주택 지하에는 지금 사는 사람이 안 계시는 것으로, 6440가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을 다 주거 상향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박용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큰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국토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서 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그것은 LH가 새로 산……

○**박용갑 위원** 그것은 LH 거고요, LH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요, LH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의 반지하 주택을 새로 산 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데 SH는 이천몇백 가구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용갑 위원** 기존에 LH가 관리하던 것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36%, 기존에 갖고 있는 것에서 약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새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입해 가지고 이주시킨 게 얼마나 되느냐는 얘가지요. 그것이 지금 1건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SH는 2642건, LH는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 LH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적정 가격에 해당되는 예산을 배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는 실적이 없고요, SH가 2642건의 계약 완료 실적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2022년 이런 사고가 나서 대통령께서도 가셔서 반지하, 주거가 불편한 이런 지역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앞으로는 LH가 매입 가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을 통해서, 지난 6월 24일 날 매입 공고를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상시 매입을 접수 중에 있다고 하고 LH 실적이 많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반지하, 지금 폭우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국토위 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하고 간담회 제안을 했는데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급발진 사고에 많은 관심 가지고 보도자료도 냈고 언론보도도 좀 많이 됐습니다. 마침 어제 국토부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운전자에게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혜택 주는 방식의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 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6건의 급발진 사고가 있었는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 리콜센터에 접수된 것만 236건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리고 늘 논란이 됐지만 급발진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그 결함을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윤종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자가 입증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을 또 제조사보고 그게 아니었다라고 증명하라는 것도 사실……

○윤종군 위원 아니, 아무래도 제조사가, 만든 사람이 입증하는 게 수월하지 그걸 자동

차 산 사람이 입증하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예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권고도 하셨고, 어제도 권고했는데 제조사들이 또 반대했지요? 어제 또 반대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제 회의 결과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마는 그에게 저희 부 내에서 이 관련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종균 위원 기사가 다 났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반대한다고.

그런데 자동차 업체들의 주장은 ‘설치를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 변경하는 게 어렵고 아직까지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 이런 주장 또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조사하고 회의는 내일 한다고 합니다.

○윤종균 위원 아니, 기사에 제조사들이,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벌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하고 회의는 내일 한다고 합니다.

○윤종균 위원 그렇게 자동차 업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게 설치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 제조사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라도 급발진 가능성이 밝혀질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민간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누구 견해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차에……

○윤종균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그러합니다.

○윤종균 위원 개인적으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달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조사에게 강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규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윤종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도 의무 설치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선 옳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종균 위원 어떻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요.

○윤종균 위원 제조사들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조사들이 따라오도록 또는 소비자들이 그런 쪽으로 사양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강제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무역 마찰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균 위원 제조사들에게 국토부가 권고해 온 것은 수년째 계속해 오신 건데 그 권고가 지금까지 수용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윤종균 위원 이런 국민 안전 사안은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2년에,

지금은 의무화돼서 다 일반화되어 있지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또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ESC) 또 만 7세 미만 카시트 의무화한 사례가 있지요,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군 위원 있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고 제조사들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정권 때 다른 나라에 없던 국민건강보험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자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대기업 말만 듣지 말고 국토부가 의지 갖고 국민 안전 차원에서 의무 설치를 강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저는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 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다방면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종군 위원 아니, 장관님께서 국회에서라도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셔야 제조사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내일 제조사들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제조사들의 반응을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요. 의무화 전까지도 대책이 필요한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토부 산하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군 위원 그 산하에 그동안 따로따로 있었던 공제분쟁조정·재활시설운영심의·채권 정리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를 두고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관련된 일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중립적인 용어인 급발진주장돌진사고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해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대안을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차손해 보장법 39조의14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 자율주행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AI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이런 대책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잘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급발진 사고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서 비슷한 형태로 급발진주장돌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거기에 넣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것은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의 권한 문제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

○윤종군 위원 답변 길게 하실 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드리면, 지금 급발진을 조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중대사고조사처 담당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윤종군 위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명밖에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4명이요?

○윤종군 위원 4명. 이것도 전기차 화재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요, 4명이.

그런데 지금 급발진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장관님 보시기에도 너무 부족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인력, 조사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담당 인원 에 대한 문제는 아마 부처 내에서 보고를 받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윤종군 위원 중대사고조사처 인원이 4명뿐이라는 게 내부에서 전혀 공론화가 안 되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걱정 인원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아니,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이것을 조사하는 기구의 담당 인원이 몇 명인지 충분한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기본적으로 국과수에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내에서 지금 역할이 돼 있기 때문에……

○윤종군 위원 아니, 국토부 안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중대사고조사처가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데 그게 급발진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국과수의 판단을 기본으로……

○윤종군 위원 국과수에서 판단을 하는데 중대사고조사처에서도 전기차 화재하고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중대사고조사처라는 데의 주 미션이 주 임무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라든지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윤종균 위원** 판정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 사실은 판정기관이 지금 국과수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또 다른 기관에서 자꾸 인원과 조직을 늘리는 것이 정부조직 원리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나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야 이게 공식적으로 정부의 의견이 되는 것이지요. 국토부가 따로 결론 내고 경찰이 따로 결론 내고 할 사항은 아닌 것이거든요.

○**윤종균 위원** 결론을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 국과수가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갖고 있겠지요. 그러나 행정 영역에서 교통안전공단이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4명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요. 한번 깊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부분에 대한 기능과 현재, 현상을 살펴보고 따로 위원님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어제도 충청 이남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몇 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고 또 많은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분들이 폭우 피해나 그 대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며칠 후면 많은 사상자를 냈던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가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든 것들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세 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행정안전부나 관계 전문가들하고 작년 사고 이후에 공동 TF를 바로 구성해서 사고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터널방재지침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터널방재지침 이게 성격이 뭐니까? 이게 국토부의 지침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핵심 사항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어디 하천에서 몇백미터 이내에 있는 하천 등에 대해서는 진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저도 압니다. 지하차도가 U자형이면서 하천 500m 이내 같은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의 지하차도는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지하차도 중에서 국토부가 관리하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가 42개소라고 그

러는데 그러면 전체, 국토부 외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하차도가 총 1000개 정도, 1092개가 있고요. 이 차단시설, 야까 저희 지침에 의해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될 곳이 443개가 있는데 그중에 국토부가 10%인 42개 나머지는 지자체가……

○권영세 위원 42개지요. 그러면 지금 도로터널방재지침은 국토부 지침인데 나머지 국토부가 관리하지 않는 400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관한 지침은 국도가, 직접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 말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나 똑같이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같이 이것을 집행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세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42개인데, 이미 시설이 설치된 10곳을 제외하고는 32개소가 신규 설치 대상인데 그중에서 4개만 설치가 됐고 지금까지 28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진입차단시설이 그렇게 어려운 시설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아침에 봤더니 이게 관급자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진입차단시설이라는 게 터널 입구에서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급자재 품목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데 물자 수급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7월 8월까지 가야 100% 저희 대상이 되는 걸로……

○권영세 위원 지금 8월이면 장마 다 지나가고 가장 중요한 시기는 다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못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추진현황 받은 걸 보면 사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급자재 아닌 걸로도 진행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거라면 왜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양안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급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사급이라고 하더라도, 사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조달청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결국 공급되는 것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권영세 위원 어찌 됐든 이거 필요한 때, 비 다 오고 끝난 다음에 우산 사는 것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 두 달만 더 빨리 됐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쉽고 죄송합니다.

○권영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전세가가 59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세가가 급등하는 원인을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수급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비아파트 부분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2법의 시행으로 4년 만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진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권영세 위원** 인상 상한이 묶이지 않고 전셋값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집주인한테 유리한 시장으로 가면 집주인이 4년치의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영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전셋값이 많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면 전세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권영세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은 전세를 이 기회에 좀 줄여 나가고 월세로 가자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데 현재로서 전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이 되면 매매가도 같이 상승이 되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갭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실제로 최근 전세가 상승하고 같이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 올랐는데 이게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된 거랍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0.4를 기록해서 기준선 100을 넘긴 것이 21년 11월 둘째 주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아파트 전세가도 서울 지역에서 올라가는 이런 이유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세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 아파트의 공급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년도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위원** 그건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서울 기준으로요.

○**권영세 위원**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서는 전년보다 좀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준공 물량은 전년보다 저조하지 않고요 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준공 물량은 괜찮더라도 착공 물량이 저조하면 언젠가는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빠르면 내년 내후년부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렇게 착공 물량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장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매매가격의 공사비로 공사를 해서는 아파트 분양이 어렵거나 또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사 착공을 뒤로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세 위원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아파트 공급이 적기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생겼던 아파트 대란, 부동산 대란이 재발될 수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익성을 따져서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좀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결국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꾸준히 일정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양평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양평 고속도로는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에 6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노선을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이 그렇게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아직 어떻게 될 건지는 안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거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받고, 사실은 오늘이 7월 10일인데 제대로 된 상임위가 오늘 처음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있어야 예산을 드리지요. 논의가 없는데 예산 받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 예산은 저희가 62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산을 62억 받아 놓고……

○전용기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년에는 62억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용기 위원 어떻게 추진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지금 저희는 빨리 부대의견에 달려 있는 62억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삼의 검증기관을 국회와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전용기 위원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바뀐 안이 아닌 원안이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지금까지 거부해 왔거든요.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원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B/C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5월에는 분명히 B/C가 KDI에서 검증했던 게 높았습시다. 그런데 23년 9월에 갑자기 낮아진 것 이것들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B/C가 나왔던 게 갑자기 낮춰지고 새로운 안이 더 높게 책정된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혹시 모를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존경하는 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해 늘 정기국회에서 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전용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뽕뽕 돌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하셔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은, 62억 예산을 받아 놓고 있고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제삼의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어느 안으로 가든 빨리하라는 뜻의 예산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삼의 기관을 저희들 마음대로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빨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제삼의 검증기관을 가지고 논의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가능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따로 찾아뵙고, 어느 의원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당 정책위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저는 예산을 62억 받아 놓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회 부대의견에 달려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사실 저는 이게 협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면 국회하고 상의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삼의 기관을 선정해서 가도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행정에서 독단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행정에서 독단으로 밀어붙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가 지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의혹이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행정부의 역할 같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난해에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그 의혹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시다마는 어쨌든 결과는 예산안 62억 원이 제삼의……

○전용기 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그러면 이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좀 빠르게 결정을 짓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저희도 이후에 검증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산 문제도 그때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리셀 화재 현장을 통해서 리튬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때 리튬의 불 끄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발이 덜 돼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런 걸 개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실 전기차에는 리튬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끝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지하주차장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주차장에서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기차의 화재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요. 운행 중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정밀 검사해서 이력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장관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났을 때 진압 방안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전용기 위원 불났을 때 어떻게 끄는지 아십니까? 차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수조에 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소방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지시사항이었고, 그때 화재 아리셀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와 소방청 등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문제는 언제 지하주차장에 수조를 넣겠습니까? 그리고 불이 나고 나면 리튬전지는 아시다시피 연기부터 가득 찰 텐데 지하주차장에 연기 차고 나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수조 가지고 오고 설치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급하게 덮는 거라도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이미 대통령께서 지시한 소화 방법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당장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압하고 추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대책을 미리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의원실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이것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드렸는데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저희 방에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A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GTX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 아마 동탄역을, GTX-A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탄역 인근 동서 횡단도로 개통 시점에 맞춰서 버스 노선을 경로 단축하고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산이 있어 가지고 물리적인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 것 같고요.

GTX 이용자 대상으로 주차요금 할인 적용해서 화성시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버스 타면 1시간이면 올라가는데 그것 주차하고 GTX 갈아타려면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데 누가 그렇게 해서 GTX 탑니까?

대통령 핵심 사업이고 수도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GTX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교통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장 분석이 미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GTX-A가 구성역까지 얼마 전에 개통이 되어서, 동탄에서 수서까지가 당초 계획할 때 한 51%, 50% 조금 넘는 승객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철도들과 비교를 꼭 할 것은 아니지만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닙니다. 초기에 50%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역 구간이 막혀 있어서, GTX-A 동탄의 존재 이유는 수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강남이나 강북 가는 것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반쪼가리가 나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동탄뿐만이 아니고 모든 GTX 정차역에 대해서는 연계교통망을 좀 더 알뜰하게 세워서 이왕 건설하는 국가기관 시설의 효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것 보면 엄청 뭐 많이 해 온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제대로 봤는지는 제가 일일이 몸소 챙길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그려 왔는지 안 그러면 지도상에만 표시를 해 왔는지 하는 것은 제 발로 직접 뛰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가 챙겨서 한 번 더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양평고속도로 62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62억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결위에서 정해 줘서……

○위원장 맹성규 아니, 예결위에서 예산 준 게 아니고 62억은 당초에 있는 원안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대안, 소위 얘기하는 대안 중에 바뀌지 않는 노선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그냥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지역

적으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예산을 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장관님은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았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을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정감사한 사람들하고 국정감사를 직접 받지 않은 장관님하고 논의하면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62억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이 아마 책정이 된 것 같고요. 배정이 된 것 같고, 다만 그 예산이 들어갈 때 부대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것은 예결위 부대의견이지요.

○김도읍 위원 결국은 예산이 확정될 때는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넣는데 그 당시 부대의견 내용이 ‘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제삼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노선을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예산이 62억 편성 확정이 될 때에는 부대의견 성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정부에서도, 전용기 위원님께서 빨리 결론을 내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부대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상치되게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2특검 4국조를 주장하는데 4국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대의견을 감히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위원장 맹성규 실행을 할 수가 없지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방침이 이 부대의견과 상치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조속하게 실마리를 풀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 참여를 했고,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두 가지 쟁점이 뭐냐 하면 첫째 쟁점은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변경됐느냐, 하나가 쟁점이 있고요.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원안과 변경된, 소위 추진하고자 하는 대안이 어느 것이 낫냐 하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부대의견에 달린 것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첫 번째 것, 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인 거고요. 작년 예결위 부대의견에 달린 것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한 거니까 지금 논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은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 고발이 돼 있잖아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고발이 돼 있는데 전혀 저기가 안 돼……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있으면 저희들도 기다리거나 과정을 할 텐데요 전혀 조치가 없어요. 저희들 당연히 국정감사 결과로 고발 조치도 하고 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없고, 국토부에서도 국정감사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정당하게 그것 보고를 해 주면 그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2특검 4국조 안에 이게 포함돼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해소를 해 줘야만 정부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위원장 맹성규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쟁점이 2개라……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예,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소영 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추가해서 제 의견을 몇 말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의 대상은 그 고속도로, 2년 동안 KDI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정부 인허가까지 득하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 갑자기 종점이 변경된 그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 부대의견에서 제삼자 검증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검증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예결위 부대의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노선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노선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1조 8000억 원 국비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것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자들 중에 단 1명이라도 소환됐다고 하는 언론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설사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행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도로행정이 적절하게 작동했는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토부의 대응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변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국회의 상임위에 속여서 답변하고 또 실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 관련 증거자료가 나오자 인정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고속도로 사업의 최종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나 또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하고는 무관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1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김도읍 위원** 우리가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이 되면 수사 중이라는 말을 쓰지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전반적인 취지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삼자 검증기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고리들을 빨리 끊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진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맹성규** 가만히 계세요. 아니, 됐습니다.

○**문진석 위원** 아니, 사실관계가 좀 다르니까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장관님한테 잠깐만……

장관님, 지금 이런 인식의 차가 드러났고요. 제가 쟁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님이 알고 계시는 두 번째 쟁점하고 지금 저희 당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쟁점 첫 번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쟁점 첫 번째 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두 번째 것을 의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여부는 저희 간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논의를 해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문제는……

○**문진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서는 마치 야당이 이 문제를 좀 결자해지해야지만 국토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아까 이소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원안이나 대안으로 갈 것인지 원안으로 갈 것인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걸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제삼의 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 원안에서 대안으로 갔을 때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국토부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게 야당이 국정조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제가……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이해하는 바를 대략 여쭙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위원장 맹성규**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데 방금 문 간사님 말씀은 첫 번째 측면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원안에서 대안으로 바뀐 과정이 불투명하니까 그 과정을 따지겠다는 것이고.

○위원장 맹성규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두 번째 쟁점은 원안하고 대안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지 그 좋은 걸 제삼의 기관 검증을 받아서 가는 거다 하는 건데, 간사님은 첫 번째 게 어떻게 가든지 간에 국토부가 알아서 제삼의 기관한테 검증을 받아서 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위원장 맹성규 아니, 장관님 그거 아닙니다.

○문진석 위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앞엿것 해결이 안 되면 뒤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문진석 위원 부대의견에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부대의견에 그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국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 문제가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위원장 맹성규 아니아니야. 간사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장관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예요. 첫 번째 쟁점이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두 번째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담긴 그것은 종속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장님 말씀에 여야 다 동의하시는지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뭐가 다른 말씀입니까?

○김희정 위원 서로 다른 말씀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뭐가 다른 말씀이에요.

○문진석 위원 제 얘기 취지는 국정조사를 우리 야당이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라는 거지요. 우리는 사업 실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원안에서 대안으로 바뀌는 과정에 불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게 의혹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장관으로서 뒷단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쭙보는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옥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간사님 말씀이 달라요.

○위원장 맹성규 뭐가 다르지요?

○윤재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첫 번째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걸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위원장 맹성규 아니, 어떻게 두 번째 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이고. 간사님은 첫 번째 거하고 상관없이 두 번째 거는 예결위 예산이 잡혀 있고 부대의견을 달았으니 정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윤재옥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두 분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달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돼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치적으로 서로 논의하셔서 정부에 국회의 입장을 알려 주는 게 그게 사업 추진에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 취지로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맹성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셔야 될 게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기초하고,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기초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간사님이나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기초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쭉 했던 내용이 갑자기 방향이 틀어진 거지요.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안해 주신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간사님들이 논의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장관님, 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지난 4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 ‘임대차 2법 개편 방향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그런데 한 두 달쯤 뒤에 어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부 여당의 스탠스는 임대차 2법 폐지다’, 두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같은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아직 정해진 거 없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스탠스가 이렇게 폐지로 정해졌나요? 두 달 사이에 무슨 일 있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쪽에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은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황운하 위원 그러면 개인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관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개인 의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게 정부 정책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황 위원님께서 뭔가 바뀌었냐라고 여쭙보시니까 바뀌지 않고 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다가 폐지로 바뀐 거 아니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부의 생각이 다르게 정해진 게 없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아까 앞엿것 다시 한번 띄워 보십시오.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가 두 달 사이에 폐지로 바뀐, 그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뭐 때문에 바뀌었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임대차 2법 개편 방향과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아직 안 정해졌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용역의 결과가 아직 도출.....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그사이에 용역 결과가 나온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운하 위원 안 나왔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아직 최종 용역에 마지막 마무리 확인 작업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황운하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이 발언의 근거, 임대차 2법 폐지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개편 방향과 발표 시점은.....

○황운하 위원 발언 근거가 용역 결과하고는 관계없어요? 용역 결과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 그때 발언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정부가 뭔가 발표를 하거나 한 것이 아직 없다는 뜻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뒤에 말씀하신.....

○황운하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도 없었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가 한 두 달 사이에, 보도자료로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두 달 뒤에 임대차 2법 폐지다 이렇게 방송에 얘기했어요. 그사이에 용역 결과도 없었고, 그러면 장관 생각이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가? 바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뀌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저것은 분명히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건 보도 설명 자료로 발표를 한 거고 방송 좌담 프로에 가서.....

○황운하 위원 아니, 보도자료가 국토부 입장이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장관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국토부 입장이잖아요. 장관이 방송에 나가서 개인 입장을 얘기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러니까 초지일관 임대차 2법은 몇 년 전부터 제가……

○황운하 위원 아니, 이거 짧게 해야 돼요. 어쨌든 용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초지일관 임대차 2법은 반대를 하던 생각이었고요.

○황운하 위원 아니, 그만 얘기해요.

용역 결과 가지고 바뀐 거예요, 용역 결과 관계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지요. 개편 방향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라는 것이 팔호 안에 들어가 있고.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 때문에 입장이……

팔짱 끼고 답변하지 마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추가로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운하 위원 답변하시면서 팔짱 끼고 답변하는 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죄송합니다.

○황운하 위원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 집 거주하는 평균 거주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황운하 위원 얼른 답변이 안 나오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공부 좀 하세요.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헌법상 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헌법상 권리입니까, 주거권이? 주거권이 헌법상 권리가 맞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거권이라고 헌법에 정의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다운 생활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는 헌법의 권리이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 헌법 제35조제3항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헌법에 독립된 주거권 규정이라고 보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황운하 위원 어쨌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조항이 아니고요.

○황운하 위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헌법상의 국민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을 위하고……

○황운하 위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걸 말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기에는 주거권 말고도 많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많이 있지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여러 가지……

○황운하 위원 그러면 주거권을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으로서? 주거권 담당 장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하는 기회가 있다면 주거권 기본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황운하 위원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개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면 그 주거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니까, 장관님?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황운하 위원 얼른 생각이 안 납니까? 거주 안정성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황운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거 안정성이고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황운하 위원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 집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이 몇 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3년입니다.

혹시 독일은 몇 년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황운하 위원 좀 더 공부하세요. 13년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평균 거주 기간이 몇 년이라는 자료는 제가 오늘 사실은 생경한 자료입니다.

○황운하 위원 모르실 수 있지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지요. 평소에 그것만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즉석에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거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택정책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인용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봤으니까……

○황운하 위원 아니, 장관님이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장관님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정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일관되게, 주거 약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려가는 정책을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일관되게 지금 저희 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임대차 2법 폐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년인데 독일은 13년이고 일본은 무기한 전세 계약입니다. 선진국은 평균 최소 3+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거권 실현 수단의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성, 점유 기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지

금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상세하게 준비해서 언제 국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견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임대차 2법은, 결국은 4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가 버립니다. 가 버려서, 보호받아서 2년에서 플러스 2년 해서 4년을 살았는데 금방 지나가서, 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4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소득 수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또 시장에 내몰려서 엄청나게 오른 가격의 전세를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운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주거 안정성, 점유 기한을 길게 보장하는 방법은 뭐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책 스탠스였고요 그것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지금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 있어서 내가 길게 얘기 못 하겠는데 상세하게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국토부의 대책이 뭐냐,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 오전에 김은혜 위원님하고도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누셨고 최근에도 법안 폐지 소신을 밝히셔서 가지고 그 부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걷은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 환수금 액수는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난 5년간은, 14년 이전에 25억 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고요. 부과 면제 기간이 길고 해서 최근에는 부과된 사례가 없거나 금액이 없는 것으로……

○정준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최근 5년 동안 용산구에서 한 차례 부과 징수가 됐었는데요. 25억 원 부과 처분을 해서 15억 원 건어져서 주택기금으로 한 7억 7000 정도가, 이 사례는 지금 잘 모르셨던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유예가 풀려 가지고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동안에 법률을 두 차례 개정해서 부과 면제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한 다음에 부과가 되는 거라서……

○**정준호 위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취지 중의 하나가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렇고 장관님도 소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초과이익 환수금액 규모 자체가 엄청날 거다라고 부풀려서 공포심을 조장하듯이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는 15억 정도밖에 거둔 적이 없다,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고 지금 장관님도 잘 모르셔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법 개정이 돼서 감면제도가 대폭 확대가 돼 가지고, 올해 3월 말에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준호 위원** 그러면 2024년 3월 법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4년 8월 이후부터 부과될 것으로 지금……

○**정준호 위원** 부과될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금년 8월부터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쭙볼게요.

8월 이후부터 올해 부과가 될 부담금 규모는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총 68개 단지에 부과가 예상이 되고요.

○**정준호 위원** 금액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 총액은 한 가구당 평균 한 1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총규모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자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호 위원** 이것 저희가 국토부에 여쭙보는 것은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장관님 개인 소신 가지실 수도 있고요 논란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법안 폐지 입장을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년 넘게 진행이 된 제도가 고작 15억 정도 걷은 게 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관님이 재건축의 실질적인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폐지론을 얘기하시는 게 조금 급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후신도시 재건축이 돼서 준공이 되게 되면, 지금 사실은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그게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비용에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금융비용도 해당이 있고 또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이런 부담금이나 다른 각종 조세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입주자들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업성을 따질 때 당연히 예상 비용으로 이것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방금 사업성 부분 키워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를 1년 동안 원칙대로 잘해 봤더니 굳어지는 규모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주택기금에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이 제도가 세수 확보도 되는 측면이 있고 서민주택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는 정도가 이 정도가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평가하는 부분에서 악화되는 요인으로 주요하게 유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형량을 해 가지고 보니까, 제도를 개선하든지 이런 식으로 1년 정도라도 제대로 부담금을 걷어 보고 나서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은데 3월 달에 유예된 감면제도가 적극 시행이 됐는데 몇 달 안 지나서, 그 부과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법안 폐지를 얘기하시는 게 개인 소신으로 보기에 는 정부 입장으로 보기에 는 좀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 문제의식 자체를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제 질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행도 안 해 본 제도를 유예까지 시켜 놔는데 또 덜렁 폐지한다고 하는 데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정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걸로 얘기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국토부에서 페달 블랙박스 권고조치를 어저께 말씀을 하셨고요. 의무화까지는 안 나간다고 하고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센티브 준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오작동 방지장치로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준호 위원** 현재 국내 차량 중에서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설치돼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딱 한 차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검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표준을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뉴스를 저희가 접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 혹시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외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번에 시청 앞 사고를 계기로 여러 가지로 정말 심도 있게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정책 과제로 부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제기준이라든지 또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잘 참작해서 저희 나름의 독자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남 양산시갑구의 윤영석 위원입니다.

박상우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가 워낙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또 국민의 그러한 생활에 광범위하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여러분들 각별한 그런 각오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덕도신공항 부분은 참 오랜 국가적인 논란과 많은 논쟁을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주의 이런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2030년까지 개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차례 유찰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대형 건설사 2개사만 컨소시엄을 허용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영석 위원 이것을 3개사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3개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차 입찰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0대 대형 건설사가 컨소를 할 때는 2개사로만 해라, 최대 2개사까지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조달청의 일반지침입니다.

○윤영석 위원 일반지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주기관에 있어야 된다는 게 조달청의 지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덕도 공사를 처음부터 저희가 특별한 지침을, 특별한 사유를 적용해서 3개사로 가야 될 만한 그런 뚜렷하고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사로 해서 1차·2차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3차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앞으로는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언론이라든지 또는 다른 전문가집단 혹은 또 업계에서 공사 규모가 크니까 적어도 3개사가 해야 이게 공사를 제대로 쳐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달청 일반지침에 기반을 안 둘 수가 없어서 그 기반을 두고 경쟁 구도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원안대로 갔던 것이고요.

지금 두 번을 해 보니까 똑같은 것을 세 번째는 할 수가 없어서 뭔가 개선을 한 내용으로 3차 공고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최대의 국책사업이고 또한 공사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상당히, 그 공사에 대한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3개사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아마 국토부 입장도 당초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조건이 그러할지라도 조달청과 잘 협의를 해서 여

러 가지,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더 이상 유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찰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영석 위원 설계 기간도 보니까 상당히 짧더라고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보니까 설계 기간이 거의 한 36개월인데 지금 가덕신공항이 10개월 상당히 짧은 편인데 설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 기간도 6년이지요, 부지 조성 공사가.

그래서 지금 부지 조성 공사가 울릉공항도 보면 규모가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한 6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 자신 있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문에 제가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설계 기간이라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참여 업체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빨리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29년 개항은 변할 수 없는 목표이고 실질적으로……

○윤영석 위원 자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영석 위원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 기술자진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세사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저금리 시대에 전세가가 좀 고액으로 설정이 되었다가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대책을 즉 이렇게 보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평가합니다.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이 사실은 많고,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가구주택인데 대책을 보니까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일자 정보에 어떤 게 제공이 되나요? 이게 되면 앞으로 전세사기 발생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만으로 충분한 방지장치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옆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도와주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센터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기능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윤영석 위원 확정일자 정보 제공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확정일자 정보를 보면 내 앞에 선순위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윤영석 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영석 위원 확정일자 세부적인 내용이 선순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런 정도, 거기에 보증금도 다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보증금 포함됩니다.

○윤영석 위원 보증금 포함되고, 그런데 이것 실제로 보면 호별로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선순위자 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요, 사실상? 정확히는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몇 번째, 1번 2번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보다 선순위는 누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그게 이 집이 얼마짜리 정도 될 터인데……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 정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앞에 보증금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잘못하면 위험하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지요.

○윤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확정일자 제공되는 정보가 상당히 개인정보 이런 것은 또 제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이 전부 다 세부적으로 보증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세대별 호수별로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기 사건은 계속 재발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냥 당장의 어떤 전세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 전세사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영석 위원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영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 전세사기 이러한 부분이 최소한 제도의 미비점, 법률적인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사기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전세사기 부분은 상당히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게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서는 최소한 전세사기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인 주택 계약 시스템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따로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 아산갑 복기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갖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 준 궁금증과 의혹에 대해서 한두 가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문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평고속도로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재 아마 예상 공기보다 1년 정도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평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히……

○복기왕 위원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복기왕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걷어 내기 위한 국토부의 노력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면 이 다른 부분의 교집합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국토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야 따지지 않고 이 양평고속도로는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 속에서 이 사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저도 동의합니다.

○복기왕 위원 그리고 빨리 진행돼야 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종점이 갑자기 바뀌었지? 바뀐 종점 지역에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이 축구장 약 5개 정도 크기의 땅이 있다던데’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의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보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원희룡 전임 장관이 갑작스럽게 백지화 선언을 하는, 사실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도 이 공직 영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 식의 행동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백지화 선언 이후에 슬그머니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이런 행정에 대한 또 사업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료라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어떤 그 의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밝히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 이 국민적 의혹도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의혹이 의혹인지 안 그러면 실체인지 하는 것도 다 빨리 해소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기왕 위원 그렇습니다. 의혹인지 실체인지에 대한 게 빨리 해소가 되어서 국민의 걱정거리를 빨리 덜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권영세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신데 7월 15일 날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지요. 무려 열네 분의 아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장마철 진입 차단 시설에 대해서 조금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시설과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지자체는 차치하고라도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이 조금 전에 32개가 아직 설치가 안 됐고 32개 중에서 4개가 설치되었고 이런 말씀 쪽 하셔서 중복되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 건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저기가 이번에 해당 지역인 저희 아산 배방 구령리에 있는 지하차도인데요. 여기도 사업대상지인데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는 6월 전에 우기 대비 재난 대비 점검을 다 하잖아요.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시장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있었던 국가적 큰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달청에서 발주는 돼 있는데 준공이 안 되는 것이고 대구와 칠곡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조차도 안 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렸고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1년 전의 오송 참사의 교훈을 뼈아프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데요. 하루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북기왕 위원 혹시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만들고 지침 만들고 하면서 늦어졌고요. 이게 관급자재라서 늦어졌다 그러는데 적어도 6월 되기 전에는 마무리됐어야 될 일이 한 두 달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기왕 위원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여당 위원님께서도 우려와 걱정을 함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을 하면서 집권을 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신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주택 인허가 실적과 문재인 정부 2년 차의 주택 인허가 실적 그다음에 착공 실적 준공 실적 이런 것들은 차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인허가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실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공공분양 공급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 계획 말씀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민간까지도 컨트롤하겠다고 하면서 공급 계획에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년 차에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요. 계획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우려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건축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설령 인

허가는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착공과 준공까지 가기에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내에 정말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권을 위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기 싫으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5년간 270만 호 공급 로드맵을 22년 8월, 2년 전에 발표를 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전체 계획 대비 실적이 한 91% 수준으로 좀 부진한 면이 있고요. 특히 착공 부분은 실천율이 더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인허가를 받아 놓고 자재비라든지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업 착공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 부분들 착공이 나올 수 있도록 PF 불안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합시다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서 막 착공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공공 부분에서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해에 LH공사가 상당히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순살 아파트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제 역할을 다 못 한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기왕 위원 역대 어느 정부든지 간에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주택 공급 활성화는 속도전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비판을 반복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려면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복기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장관님, 일단 먼저 저는 지난번에 전세사기 청문회 이후에 국토부가 조금은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이 늦었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진 태도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하 국토부 담당자들께서 이렇게 전세사기 해결에 대한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실행해 주시는 모습에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여야 어느 당 할 것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 오늘은 제가 시청역 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직 이게 급발진인지 페달 오조작인지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차량 돌진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청역 사고가 제 기억으로는 급발진 의심 사고다 라고 하는 사고들 중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지금 국민들이 길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 돌진 사고가 굉장히 많지요. 잇을 만하면 터지는 게 바로 돌진 사고, 급발진 의심 사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사고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다 주장하고 제조사는 페달 오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운전자가 노인이면 노령 운전이라 그렇다 이런 논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원인 규명 문제 해결하는데 국토부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까도 질의에서 나왔던 페달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 제조사에 권고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오전에 제가 이 시청역 사고 이후에 어떤 대응 방안 하고 계신지 자료를 받았는데 한 장으로 왔는데요 그 내용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에 대한 내용이 거의 유일하게 예방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급발진이나 급가속 사고라고 하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장관님, 혹시 비상제동제어장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 아십니까? 차에 달린 브레이크 뭐라고 그러지, AEBS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소영 위원 맞아요. 영어로는 AEBS라고 하고 오늘 저는 그냥 편하게 긴급제동장치 이렇게 불러 보겠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차량이 쭉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감지하고 제동을 거는 거지요. 그래서 정지하는 거지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혹시 이 기능을 운전하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난 2022년에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고 손자가 같이 피해를 받은 그 사건에서도 그랬고 대형 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평창 사건 때도 그렇고 이 긴급제동장치만 달려 있었어도 사고가 대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돌아가시는 것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진단과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제동장치가 국내에 의무화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소영 위원 화물차량 버스는 2017년 이후 출시 차량부터 그리고 승용차는 작년, 그

러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시되는 차량에 지금은 이게 의무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능만 제대로 작동했다고 하면 그게 원인이 급발진 이든 아니면 페달 오조작이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그 차량에 이 기능 탑재되어 있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그 차종이 의무화 대상 전이기는 하지만 고급 모델이어서 긴급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뿐만 아니라도요 2023년 이후에 출시된 차량에서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난 건수들이 적지가 않고요. 또 제가 교통안전공단으로도 받아 보니까 이것 설치 의무화된 이후에 출시된 차량에서 이 비슷한 사고들이 벌써 여러 번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런 충돌 사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작동이 안 됐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장관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소영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긴급제동장치를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게끔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국토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규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한 부분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어요?

첫 번째, 속도적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규칙상 이 긴급제동장치가 작동을 하려면 이차가 10km에서 60km 사이에서 운행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시청역 사고 차량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시속 100km가 훨씬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빠르게 갑니다. 100km 이상 막 급가속해서 달리고 있는 질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미국에서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것 의무화하겠다고 확정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 확정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신차의 90%가 이것 달려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면서 표준하고 기준을 같이 마련한 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시속 60km 이상의 운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작동하지 않도록 자동차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미국은 시속 145km까지 이 제동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하라고 제조사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현대차도 자율적으로 시속 85km까지 이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부는 너무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속도 기준뿐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긴급제동장치가 해제되는 조건이 이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급가속을 위해서 가속페달을 힘껏 밟는 행위가 있을 때 이 기능이 해제됩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엑셀을 밟는 거예요, 힘껏. 그러면 그 사람을칩니다,

제동장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영 위원 저는 원인 규명도 중요한데요.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이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국토부가 열심히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긴급제동장치의 적용 기준, 작동기준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께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 국토위에도 자세하게 면밀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꼼꼼하고 아주 구체적인 지적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우리 부 전 역량을 동원해서 챙겨 가지고 다음번 회의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따로 보고를 드리거나 서면보고를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지난 3월에 대통령께서 대구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그 자리에서 TK 신공항 관련해서 SPC 구성을 위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시를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LH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LH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도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SPC 구성이 그렇게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2029년에 개항을 하려면 지금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사업 진행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6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개정안 발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그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부처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그래서 내년도 통합 신공항 관련 예산을 576억 신청했는데 317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2차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개항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약속된 날짜에 개항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의 가덕도도 마찬가지로 대구 신공항도 주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혼잡도로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재옥 위원** 인천·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대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5년마다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보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공사비, 이 공사비에는 조사나 설계에 드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의 취지하고 시행령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6대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는 평균 10%고요. 보상비가 90%인데 예를 들어 돈 1000억 되는 도로 사업에 설계비하고 조사비용 10%로 하면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50%를 지원해 주면 결국 전체 사업비의 5%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혼잡도로 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의 현실은 이 도로가 계획이 돼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1000억 이상 드는 도로의 경우에는 1년에 지방 예산으로 100억 200억 해 봤자 보상을 하려고 하면 또 땅값이 올라 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끼리 발의 비스킷이에요. 국가에서 혼잡도로 지원사업을 한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형식적인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제 현장에 도움이 안 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다시 5년 차 계획을 세울 텐데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행령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0억짜리 사업에 국가에서 혼잡도로 지원사업 한다면 돈 50억 지원해 주고 혼잡도로 사업한다는 그 말을 그런 정책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제가 짧게 답변드리면요. 저희 부 SOC 예산이 수년째 총액 20억 원 밖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정부 재정전략회의에 가서 다른 부처 장관님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리고 그 총액은 묶여 있는데 종전의 스킴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안 쥐도 될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 안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 프로젝트도 있는데 총액을 늘려 나가는 노력을 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은 종전에는 예산 사정상 거기는 안 준 부분도 이제는 자꾸 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아까 크게 보면 노후신도시 재건축에다 뭔가 제반시설 지원을, 종전에는 도로 뺐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혹은 보상비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도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잣대로는 지원 안 해 주던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줘서 SOC의 전체적인 총량을 늘리면서, 총량이 안 늘더라도 그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회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CR리츠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내렸는데 사실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8% 정도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게 다 지어 놓고도 분양이 안 되는 게……

○**윤재옥 위원** 물론 그게 더 급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진행 중에 미분양된 주택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비롯한 특별한 지원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 흥덕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도 비가 충청지역에는 정말 많이 내렸는데, 극한 호우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1시간에 140mm가 내리고 하루에 몇 개월치 비가 내리는 그런 호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특히 지하철도 같은 데 침수와 관련된 방재지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상황에 맞게 극한 호우가 내리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송 지하 참사도 있었고 부산도 지하철도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송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 주 저번 주에 오송 지하철도를 두 번이나 방문해서 현장 안전점검을 한번 쭉 해 봤는데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 주면서 그것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장관님, 현장 행정도 많이 하시는데 오송 참사 이후에 지하철도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번 오송 참사 이후에 지하철도 안 전강화제도 TF가 정부에 출범을 했고 거기에 국토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방재지침도 개정을 했는데, TF에서 전국 지하철도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를 국토부에서는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 자료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받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관할해야 되는 지하철도 중에서 피해, 수해 차단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적으로 차단시설 설치 대상이 443개인데 42개가 저희 소관 사항이고요.

○**이연희 위원** 그게 지금 6월 말까지 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칠팔 월이 돼야 다 완료가 된다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아까 복기왕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좀 빨리 조치돼서 적어도 6월 전에는 마무리가 됐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두 달 정도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지침을 보면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다 화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피난대피설비나 시설 이런 게 지하철도 침수에 관련한 규정들은 전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오송도 좋고 부산도 좋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 지하철도를 방문해서 방재와 관련된 시설들을 어떤 방향으로 더 강화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 점검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연희 위원**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본 부분은 이걸 지어 놓거나 지하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관리는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대피시설이나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지자체별로 알아서 막 하고 이런 저기인데.

PPT, 저기에 지금 띄워져 있는데 오송 지하철도 참사가 난 이후에 안전대책으로 비가 15mm 정도 지하철도에 물이 차면 저 차단막이 내려오게끔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그날도 바람이 약간 불었는데 저렇게 차단막이 휘날려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지만 극한 호우 상황은 태풍이 동반된 그런 호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람이 불면 저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과 관련해서 전국이 다 똑같냐 그랬더니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저런 부분도 일관된 기준을 세워서 태풍이나 그런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차단막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게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PPT를 보여 주시지요.

저게 작년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지하철도인데 저렇게 물이 완전히 들어갔어요. 들어

찾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안에 갇힌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안전바, 지금 오송 지하차도에는 저런 것을 안전대책이라고 설치를 해 봤어요. 저게 높이가 4~5m 되는데 저 안전바 밑에 두 줄을 설치해 가지고 저렇게 물이 짝 찬 상황에서 어떻게 대피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저 대책이 과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리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전국에 설치된 1019개의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관련 부처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저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된 안전대책들을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서 촘촘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고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저것은 지자체마다 제각기 기준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건데 저것은 전주지역에 있는 지하차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저것은 그나마 물이 차더라도 위의 바를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건은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송 지하차도는 안전바를 2개만 설치를 해 놓고 저기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해 봤는데, 아까 그 사다리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사람이 올라가는 저 지점이 사실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가 물에 갇혀서 버스 승객들이 대피를 못 하고 돌아가신 사망한 지점인데 저런 곳에 만약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사다리가 촘촘하게 있어야 그거라도 붙들고 매달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줄사다리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 화면은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지하차도도 그렇고 앞으로 개통하는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울 때 그런 극한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어떤 경우든 안에 갇힌 사람이 탈출할 수 있도록 저런 안전바, 안전사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들이 그 지하차도를 갔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오송 지하차도가 길이가 한 460m 정도 되는데 회차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회차로를 다시 만들려면 지하차도의 안전구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일정 길이 이상의 지하차도는 만약의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회차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 더 줄 수는 없나요?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하시지요.

○**이연희 위원** 그래서 극한 호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곳곳에서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대피시설 이런 부분들 기준을 강화하는 데 좀 더 국토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아주 꼼꼼하고 상세한 지적에 감사하고 감탄합니다. 주신 말씀 잘 챙겨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진행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맹성규** 예, 그러시지요.

○**한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대신 추가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6월 25일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도 좀 들어 주세요. 국정감사 당시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한 36건 시정하고 조치 요구 사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왔는데, 24년도 4월에 국회로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보고서를 통으로 저희한테 보내 왔는데 이걸 저희가 보고는 정말 한숨이 나와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12번, 이걸 차관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누가,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안을 변경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10월 국정감사에서 설계업체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종점부 접속 부분 등 예타 노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 방향을 착수보고서에서 제시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하루 가서 보고 바꿨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참고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이것 용역사가 애기한 것 그대로 담아 가지고 해 놓고는 ‘완료’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9번도 동해가 경동으로부터 기존 예타안과 다른 노선안을 제시받았다고 답변했는데 해당 노선을 제시받은 일시, 제안 문서, 제안 이유 제출 이렇게 저희가 보냈더니 이것도 그냥 10월 용역업체가 답변한 내용 그대로 적어 놓고 ‘완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제출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해 가지고 다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첫째는 이들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언급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우리 국토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용역업체 증언 내용을 가지고 ‘조치 완료’ 이렇게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 그 증언을 자체 검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2차분이 23년 9월 20일에 착수를 해서 올해 1월 19일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2차 연도 준공계획 그리고 검토조서,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오늘 전체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요청이 있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무자격 업체 진행 관련된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1그램 이 회사가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종합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증축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 가능한데 이 업체가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이기 때문에. 해서 어느 회사하고 한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국토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행정조치를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서 저희한테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도 같이 제출을 위원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지금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저희가 조금 논의하다가 말았는데 저런 게 다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된 예산을 쓰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자료제출을 할 때 내가 볼 때 차관님 정도까지도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검토를 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저번에 준 자료도 사실은 스크린만아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쟁점이 많고 민감한 문제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번에는 자료제출을 할 때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차관이 챙겨서 자료를 만들 것이고요. 제출하기 전에 저도 공부 겸 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용산 업체 건은 저희는 사실 관계 없는 일이라는 하나 건설업 면허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서 최대한 자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질의하십시오.

○한준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논의할 때 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요.

○한준호 위원 듣기는 다 들었어요. 제 답변에 그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이후에 예산이 작년에 반영된 게 제가……

○한준호 위원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멈춰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멈춰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이것 인칭 시에 일단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건 기억이 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이해하기는 예타안과 대안 중에 어느 노선이 더 좋은 것인지를 빨리 제삼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해서……

○한준호 위원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논의를 했던 것은 두 노선 중에 어떤 게 좋냐가 아니라, 종점 변경을 하는데 용역사는 현장을 단 하루 갔고 그때 참고를 했던 게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참고했는데 그 계획서가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양서면 쪽으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게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국토부는 왜 그런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왔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라는 거고요.

현재 타당성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못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못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조찬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제가 질의한 건 기억이 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기억이 납니다.

○한준호 위원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아마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바로 위원님께 찾아가서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준호 위원 아니요, 제대로 설명 못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요?

○한준호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연례적인 연례 행사에,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발주할 공사들을 담당할……

○한준호 위원 아니, 장관님, 보세요. 장관님 전문가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연례 공사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한준호 위원 전문가이신데 지금 방금 예타가, 타당성조사가 안 끝났다고 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준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타조사 끝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심의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본·실시설계가 여기서 바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예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그 회의가 양평고속도로만을 위한 회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력사들과의 연초 교류회 같은 그런 형태의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한준호 위원** 아무리 연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담는 내용이 기사화되고 이 기사화가 논란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중에 한국도로공사 측 통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번 회의 끝나고 바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쌓여서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토위에서 요구한 자체감사 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자체감사가 지금 시작되고, 6월 달부터……

○**한준호 위원** 자료조사는 1월에 착수를 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전달받은 게 2월 지나서 받았기 때문에……

○**한준호 위원** 그러면 면담이나 이런 사실관계 확인은 다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현재 자료조사하고 실지감사를……

○**한준호 위원** 아니, 자료조사를 지금 몇 개월째 합니까?

혹시 면담은 하셨어요, 관계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지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언제 완료된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셨는데 감사 범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 완료 이행 여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 범위에. 이게 감사 범위가 맞아요? 저희가 이런 요구한 적이 없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7월 19일까지 국토부 자체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예비조사를 했고……

○**한준호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좋습니다. 그때까지 한다라고 치더라도 저희가 감사 범위를 과업 완료를 이행했나 이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해서 담당자 징계까지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는 타당성조사 이게 당초 계약보다 6개월 정도 밀렸고 두 번째는 1차 연도 용역이 마쳐지지 않았는데 준공을 100%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18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 여기에 대해서 사업관리나 감독이 부실했고 책임소재도 가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1차 연도 과업 이행이 안 됐는데 100% 준공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전액 지급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법률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이게 저희 요구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감사 범위로는 저희가 요구한 사안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가지고, 과업 완료 이행 여부나 이런 것 조사 하라고 저희가 그때 논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담아서 조사하시고 7월에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 내용이 꼭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국감 때 이 질의가 다시 나오지 않

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오늘 지적하신 내용이 감사 결과에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이게 지금 18억 6000 자체가 엉터리 집행됐더라는 부분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 1년간 돌아봤을 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거짓 그리고 전 장관님에 대한 거짓 증언 그리고 그동안에 왔었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잘못 쓰인 부분들 등 이런 것들을 다 합해 봤을 때 이게 중점을 변경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이는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아직도 있다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토부만이라도 정확히 국가사업을 잘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저희가 요청을 했던, 지난 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요청드렸던 내용들 제 질의를 다시 확인하셔서 이 자료들 잘 주시고요.

지금 2차 연도 3개월분이 지난 9월 용역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2차 연도 것은 그때 B/C 할 때 용역이 중지됐던 것을 잠시 풀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준호 위원** 중지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62억을 지금 이런 상황에 쓰라고 저희가 예산 담아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시지요? 진행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해 놓은 것이지, 저희가 예산 62억 담아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그냥 암암리에 뭔가 막 진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가닥을 잡기 전에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준호 위원** 일단 조사하셔야 되는 것과 국정감사 때 36개 안에 대해서는 용역사 이야기를 담아 가지고 저희한테 ‘완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제대로 다 조사해서 이런 자료들 다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실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챙겨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원은 차관일 겁니다. 차관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를 같이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영부영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먼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거니까 처음부터 즉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다음에 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영 위원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임태영입니다.

장관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요. 최근 대통령께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기대한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 아니셨나라고 생각합니다.

○임태영 위원 결론적으로 교통, 산업, 주거, 문화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혁신도시 지역으로만 모아 놓다 보니까 목표했던 정주여건 개선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발전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아닌 각 지역의 원도심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님께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성이 잘 부합하는 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임태영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혁신도시만으로도 계속 이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1대에도 법안 내고 이번 국회에서도 또 2차 법안 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는 물론이고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각별히 살펴보고 통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까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되는 내용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하여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새로운 활력소를 위해서 마중물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그냥 허허벌판에 기관만 모아 놓다 보니까 정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불편함이 많고 또 그 이상 발전이 되지 않는, 1차 이전의 실패를 잘 새겨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특성에 맞는 기관들이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제 의견에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천이 철도의 요충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염태영 위원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의 교차역이고 동양 최대의 조차장역이 있고 또 철도정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가 됐는데 4년이 지났어요. 여러 가지 노선이 잘못 되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계획을 보면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충주에서 강릉선에 이어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누차 해 왔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원희룡 전 장관도 제천에 오셔서 제천역에 대한 중요성 또 이 노선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같이하시고 예산을 떠나서 한반도의 중심에 철도의 노선은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현황은 보고를 받았습시다, 현황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한번 제가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태백선으로 연결되는 원주, 제천을 통해서 영월, 태백, 동해로 이어지는 그런 신노선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점역을 그렇게 패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천시민이나 인근의 모든 주민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새로 오시고 나서 또 22대 국회가 개원됐으니까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노선이 확실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23년 12월에 설계가 확정 고시됐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위에 와 있다는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철도국장께서 이 진행 상황을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한 질의인데요, 21대 국회 이틀 남겨 놓고 야당 단독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지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폐기가 되었는데 22대 와서 다시 이 법안을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재의요구 시에 지적했던 부분, 문제점들이 고쳐졌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부가 그것을 치유한 대안을 발표했고요. 그 치유한 정부 대안에 지난번 청문회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시하셔 준 의견들을 담아서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은 주민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동의하는 부분만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보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여야 간 합의가 돼서 빨리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피해자들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 건은 일도 각 정당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 수 없는 민생을 위한 구제법안이고 또 앞으로 방지를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뜻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태영 위원** 하여튼 주로 선구제 후회수가 문제의 핵심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표현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실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도 할 수 있도록 또 빨리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엄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할 때 1기 신도시 재개발 전용 미래도시펀드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저희 기본방침은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는 국민주택기금이나 혹은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저리로 조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들 질문하실 때 답변을 보니까 금융 쪽 지원을 염두에 두신 그런 답변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다른 지원 방침은 생각하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익은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다음 번 회기나 이럴 때 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으로 충분히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 법률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노후화를 앞두고 있는 시작되고 있는 1기 신도시들이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김기표 위원 방안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안을 주로 강구하고 있는 법률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통합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김기표 위원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든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용적률을 전보다 높인다든지 이런 법안이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1기 신도시 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분담금을 좀 내고라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권 내라도 지금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분담금이 거의 반에 육박할 정도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용적률을 당연히 높여서 다른 게 민간 분양이 돼서 그 이익으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재건축의 기본 골격인데 문제는 그 지역에 분양이 제대로 될 것 인지도 미지수인데다가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분담금을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용적률이라는 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용적률을 무한히 높인다고 해서 삶이 쾌적해지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0% 규정하던 것을 지금 4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법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450%로 만들어서 용적률을 높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도시의 미관은 어떻게 될 것이며, 늘어난 그 인구에 걸맞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재건축사업이 과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사실 그 걱정을 합니다. 지금 선도지구 선정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서도 정확한 분담금이 결정이 됐을 때 과연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동의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100%, 최종은 아니지만 그런 데 대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지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여러 주민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이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과연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열의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초과이익 환수 얘기를 하고 또 찬반 논란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는 그러면, 초과수익 환수 얘기가 아니고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령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하나의 어떤 보조하는 혹은 융자하는 그런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국가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보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큰 방향에서는 제가 재건축, 1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건축이나 재정비 사업들이 과거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스탠스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앞으로도 장관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꼭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이 옛날에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해 주지 않으면, 사회 전반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 도시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어떤 공해가 되는 주거환경이 되는 문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나 사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시대 그다음에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의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금 약소한 지역이랄까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을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SOC 예산 이야기할 때도 같은 유의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집값이 막 오르고 또 각종 도로를 닦아야 돼서 개발 예산이 모자라고 할 때 나름대로 정해서 이것은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고 하던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못 돌아보고 쳐다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원을 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안고 가야 될 것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백

투 더 퓨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다 부서진 도시에 사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암울한 세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 있던 생각들을 바꿔서 새로운 지원 대상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잘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장관님 또 두 분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당시 결정했던 시장으로서 몇 가지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가덕도신공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문제는 지방의 사활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군통합공항 이전 이걸 2029년까지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SPC 문제라든지 몇 가지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 관계 부서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관계 부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2029년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관계 부서랑 협의하실 때도 국토부에서는 2029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아마 국방부 기재부가 중요한 협의 대상이 될 텐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관계 부서랑 협의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줘야 될 부분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 이전해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가 두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진 위원 민간공항은 국토부고 그리고 군공항은 대구시가 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같은 장소에 두 시행자가 할 경우에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군공항 시행사업자인 대구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동의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입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군공항과 관련된 이주자 주거안정 지원 대책입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그중의 하나가 신속한 이주를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법에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요. 아까 부산 가덕도도 비슷한 경우지만 법에 근거 마련해도 또 보상법에 규정이 있어야 실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법 개정할 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기간을 당겨야 되는데요. 당기려면 절차를 당겨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행과 관련된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민간공항 토지 보상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보면 실시설계 이후에 토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2026년 7월이 되어야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기본계획 후로 토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바꾸면 1년 6개월이 단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토지 보상 사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SOC 공사의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앞의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노후신도시도 사실은 기간을 많이 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주민들 동의를 바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슨 조합 만들거나 추진위 만들거나 하는 기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렇게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가덕도도 그렇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제때에 건립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은 광주의 공항 이전 작업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들이 공항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지방 미분양 문제입니다.

지방 미분양은 심각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이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과 그리고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 이 미분양이 지방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미분양 전체의 20%가 준공후 미분양인 것 같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그 미분양 물량 중에서 82%가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인데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한 줄로 그것도 건설산업 부분들에 한 줄로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텐데, 대책을 갖고 발표하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각종 조세 감면 부분들 중에서 일부 완료된 게 있고요. 또 CR리츠가 지금 제일 큰 실행 수단입니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비 태핑(tapping)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을 CR리츠를 통해서 사 주기 시작하면 돈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에만 있는 미분양 물량이 1만 1000세대인데 국토부에서 CR리츠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근 5000세대 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소화가 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조세 관련 규정들은 이미 개정 완료가 된 상태라서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윤재옥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과 간사 간의 기초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진전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의 노력이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게 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챙겨서 정확하게 아까 한준호 위원님……

○문진석 위원 그런데 7개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는……

○문진석 위원 국민의 60%가 지금 특혜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인데 국토부가 야당 위원들이나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필요한 감사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진석 위원** 감사를 7개월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지요. 감사를 하라고 국정감사 결과가 통보된 게 2월 말 정도이고 그래서 자료 조사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준호 위원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들을 다시 챙겨서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해명할 것들은 분명히 해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혹이 규명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하고 사업이 재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의혹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중부세 폐지가 장관의 개인 소신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방침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주무장관이 아니라서 정부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정부 차원에서 중부세 폐지를 무슨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거나 회의에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않았던 것 같고……

○**문진석 위원** 중부세라는 세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문진석 위원** 그런데 세수가 계속 핑크 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중부세마저 폐지한다면 세수가 더 핑크 날 텐데 그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마련해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제가 모 방송에……

○**문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개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부동산 관련 세금이고 부동산 주무장관이어서 제가……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이 정부의 기조는 아니라는, 방침은 아니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셋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을 빨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같은 기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셋값 폭등은 단순히 그 법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문진석 위원** 그런데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사실 임대차 2법보다는 전세가가 폭등한 이유가 따로 있지요.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세사기를 포함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또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라든가 이런 비아파트 부분의 인기가 시들어지면서 아파트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주원인이다 생각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진석 위원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지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비아파트 부분의 수요가, 빌라에 살았을 수요가……

○문진석 위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외생적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요. 금리가 올라가서 구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당분간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일단 전세 살겠다 이런 기류도 있을 거고.

사실상 그런 것이 주원인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공급을 못 했고 서울도 18.4%밖에 공급이 안 됐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공급 대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 것이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장관께서 전세가가 일시 폭등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세계약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게 어떻게 일시에 폭등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소위 말해서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되면 사실상 4년 계약을 해 줘야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폭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문진석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점이 각각 다르잖아요.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법을 폐지하면요 전세가 폭등 막을 길이 없어요. 전세가가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풀려 버리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가 폭등을 막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차 2법이 전세가 폭등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제하는 순간에 전세가는 훨씬 더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수급에 관계되는, 기본적으로 수급의 문제이고요. 그게 매매시장하고 관련돼 있고……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급의 문제인데 왜 애먼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고 이렇게 주장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진단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진폭을 크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원인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일정 부분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는 진폭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세가격 변동의 진폭을 크게 한다.

○문진석 위원 전세가 폭등이라는 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임대차 2법은 거의 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임대차 2법을 폐지하면 전세가가 폭등하지.

2023년에 2022년보다 빌라가 몇 채나 줄었다고 보세요, 빌라 신축이?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023년에요? 2024년에?

○문진석 위원 2022년 대비 2023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만 1800이에요. 1만 1800인데, 2023년에 1만 1800세대가 신축이 됐고 착공이 됐고요. 2022년에는 4만 4000세대가 착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그쪽의 빌라 수요가 주로 전세 수요를 노리는 투자가들이 사거나 또는 회사가 전세를 놓거나 하는 건데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문진석 위원 결국은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빌라 신축이 아마 감소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이야기 많습시다.

○문진석 위원 사실 빌라가 서민들의 주택 사다리였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금 전세가격도 빌라 쪽은 약세이고요. 약세니까 아마 건축업자들도 짓지를 않고……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가격 약세인 것은 아는데 그 이유가 빌라 신축이 좀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도 줄고 그 원인은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빌라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 거지요.

○문진석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 거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했지만 LH가 매입약정형 신축 매입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년 해서 전체적으로 12만 호를 신규 매입약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드라이브를 걸어서 상당한 성과가 상반기 중에 있고요. 설명회마다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넣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폭등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데 빌라라든가 이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저도 얼마 전에 똑같은 지시를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빌라 쪽에도 안심하고 전세를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

○문진석 위원 그런데 그것 빨리 발표하셔야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리고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건축을 통한 임대 물량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 신축 매입임대 사업을 전향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전세대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확고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전세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는 안이 1988년입니까? 개정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안 개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우리 서민들 전세시장에 대란이 일어났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 저희들이 사실상 읍소까지 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꼭 하고 싶으면 시범지역이라도 지정해서 시범실시라도 해 보고, 그래서 그게 정말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때 전면적으로 확대하자, 저희들 법사위에서 그렇게 읍소까지 했는데도 밀어붙인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2월 달에 20년 만에 우리 정부에서 가장 큰 지방권 GB 해제 방안을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그 취지가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역에서 필요한 용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지방 소멸을 막아 이런 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그 일환으로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예외로 지정될 수 있게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각 지방으로부터 지역전략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도읍 위원 검토 심의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8개 시도에서 33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중에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동북아 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맥도 그린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이 신청되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 사업은 결국 우리 정부가 지방의 권한 확대와 유연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역은 도약하고 환경은 살리되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모토하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결국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이 사업 이 개편안은 국토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부산의 4개 사업을 포함해서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지방에서 신청한 지역전략사업들은 반드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유념해서 챙길 테고요. 일단은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사업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마침 역시 국토위원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여야 협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읍 위원님 주제 저도 준비했는데 좀 추가로……

(웃음소리)

사실 현재 국토부가 국가 물류플랫폼 구축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아까 그 취지는 우리 김도읍 위원께서 다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네 군데 정도를 상정하고 국가전략산업 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의 하나의 야심찬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동남권만 보더라도 지금 부산광역시와 경남이 같이 신청한 상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동남권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물론 광역시도에서 신청한 과제, 공모 명칭은 다 달라요. 동북아 물류플랫폼 또 국토부는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또는 국가 물류플랫폼 명칭은 다 다른데 목적은 다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통합적인 하나의 법률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물론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발의가 돼서

그 속에 국제물류특구가 들어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가 시행하면서, 그리고 부산 글로벌 특별법은 행안부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류플랫폼에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략적인 사업이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 전략사업이 제대로 가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용역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 관련된 용역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용역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민홍철 위원 아직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발표도 민생토론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각 광역시도에서 해당 지역에서 공모를 했을 건데, 그러면 올해 안에 결정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다만 이 두 가지 법에, 부산 특별법과 물류진흥 특별법에 아마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건데요 그 지역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배치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동남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그래야 가덕신공항의 어떤 트라이포트 철도와 도로, 항만이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전략적으로 해제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7월 1일 부로 그린벨트 해제권을 많이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역 현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사전협의제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의 권한이 예전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토부에서 위임해 준 만큼 지자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할 때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사전협의가 없을 수 없는 것이 GB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어서 인접한 시군 또 시도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국토부 협의제도를 두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런 게 없다면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형식적으로는 3배 이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나 똑같다 이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래 가지고 옆 자치단체와 충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면 국토부가 특별히 귀찮게 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김은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1기 신도시 노후도시 재정비는 주체가 어딴니까? 정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조합, 조합의 의뢰를 받은 신탁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조합이 주체입니다. 다만 국가가 법으로 나서고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기존의 재건축사업과 같은 조합이, 물론 조합 방식으로 안 하고 신탁사로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김은혜 위원 그렇지요. 도정법보다는 특별법이라는 취지가 통합재건축으로 훨씬 더 속도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는 속도만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 1기 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도시 재건축 이후 달라질 신도시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상상을 해 보면……

장관님, 혹시 분당 같은 경우에 재건축 이후에 증가하는 세대수 혹은 인구 규모에 대한 추계를 잡고 계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개략적인 추계가 8월 달에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될 터이고요. 저희는 그전에 이미 또 추계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략 지금 현재보다 한 50%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추계는 기본계획 안에 담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세대수가 늘겠지요. 인구는 봐야 될 문제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인구가 아니고 세대수 기준으로요.

○김은혜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단순추계로 65%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제자리 건축이나 평형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그러면 지금 분당의 경우 8만 4000이 재정

비 대상 세대입니다만 이게 한 14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에 저는 교통대책 그리고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가득한 도시섬이 될 테니까 말이지요. 물론 8월에 봐야겠습니다만 ‘나는 도시계획은 모르겠고 일단 선도지구만 지정하면 되겠다’ 그런 국토부의 뒷짐 지는 일은 안 일어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혜 위원 분명히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교통지옥이 될 수 있는 상황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하나 제가 들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하나 보여 드린다면, 지금 판교-분당동을 거쳐서 광주 오폐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이 있습니다. 이게 일일 교통량으로 하면 6만 4000대 이상 하는 전국 3위의 체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내려가는 차량, 광주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뒤엉켜서 거의 5km 가는 데 30분이 걸립니다. 시속 10km인 셈이지요. 그런데 현재 광역교통이나 지하철도 대책이 없어요.

신도시 재건축을 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주민들 고충을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지하철 8호선 연장해 달라’ 10년째 외치고 있다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또 ‘분당동-오폐까지 연장하자’ 하지만 정부는 계속 ‘B/C 안 나온다’ 그것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판교-분당동-오폐 연장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가 이런 역할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교통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하고 현재 세대 이익의 균형을 반드시 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2차 도시철도망 승인 신청을 하고 또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주민들은 계속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곳은 계속 멈춰 있어요, 10년째. 재건축을 감안하신다면 이것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신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 교통대책은 분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기 신도시, 모든 택지 기반 혹은 신도시를 허물고 미래 신도시를 만드는 곳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되는 국토부에 대한 제 요청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50%, 65%의 세대수가 추가 늘어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교통대책 중의 하나로 8호선 연장 그리고 백현마이스역으로 불리는 분당마이스역, 오리역 SRT는 분당 재건축 착공 전에 첫발을 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사무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다는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도시 구역 내에서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세대수가 적지 않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광역교통 차원에서의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위원**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금 기존 2기 신도시 교통 대책 세운다고 쪼쪼매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지 주민들하고 반드시 간담회 가지셔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장관님, 잠깐 휴식 시간에 저희끼리 장관님도 극한직업이라는 생각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감사합니다.

○**염태영 위원** 오늘 아침에 쿠팡 택배 배송원 실종 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전에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마 새벽배송 야간배송 생활의 편의는 있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같이 주문한 것이, 쿠팡CLS 포함해서 모든 택배사들이 택배서비스 사업자로 허가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 꼭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통해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즉각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서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대항력 있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상향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법무부 소관이고 또 법사위 소관이어서 아무래도 법사위나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감이 적어서 개정의 노력을 그만큼 덜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의 수준을 지역에 따라서 너무 큰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계약을 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다면 서울 사람은 1억 6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5500을 최우선변제를 받고 부산 사람은 8500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28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불이익을 이 안에서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만들고 이 비율을 고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온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서울의 싼 집이나 부산의 비싼 집이나 어느 곳에 살아도 국민들은 평등해야 된다는 그 일반 원리를 너무 무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개정을 반드시 국토부가 법무부와 함께 바로 착수해 달라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연구하고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난번에도 그 정도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협의를 거쳐서 현실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말씀을 꼭 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법 개정의 핵심은 이 법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장관님의 표현으로 하면 주택지원금이나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피해지원금 이런 수준에 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느냐 아니냐 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는 기본방침이 똑같습니다마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지만 저희들은 그분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 드리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그 방법으로 결국 만나게 됩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그건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깊이 있게 좀 더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공공매입을 통한 방식과 피해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런 최우선변제금 방식으로 할 때 예산의 추계를 잡은 것을 바로 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작업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저도 확인해 봤더니……

○**염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도 장관님 이해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것을 바로 해야지만 우리가 법안에 대한, 이번에 실질적인 법안심사 통과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법안심사소위 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저도 지역 사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2억 원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불용 처리되려고 그래요. 작년에 불용 처리했거든요. 경기남부 지역에 반도체 벨트라든지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항공 물류를 예상해서 국제공항을 놓는 것에 대해서 제6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에도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을 올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을 지난해도 안 했어요. 올해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염태영 위원** 예산은 잡아 놓고 계속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아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또 광주공항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대구와 광주만큼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특히 민군 통합 공항이 아니라 국제공항만이라도 필요한지를 먼저 용역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을 예산을 세우고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염태영 위원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지역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을 전제하는 애가지 않습니까?

○염태영 위원 국토부는 지역 간 이견이 발생하면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용역비를 세워놔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런데 그게 가야 될 땅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연구를 선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가야 될 땅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염태영 위원 그런 식으로 미흡하게 계속 책임을 미루고 이 문제를 방기한다면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지요. 그럴 거면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염태영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지요. 국토부가 동의하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국토부가 동의하지 않는 예산이 왜 세워집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이후에, 국토부가 용역비를 세우고도 2년 연속 안 쓸 때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무책임성은 국토부를 향해서 반드시 대안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내부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따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더 할 얘기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앞 전 질문에서 우리 주택 공급 문제가 이 정부 들어서도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세대란이라든지 또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함께하면서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면 주택 공급은 문제인 정부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기 하려고 했다는 시각으로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택이 무너졌고 지금 우리도 힘들다라고 핑계

를 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전세대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임대차 3법도 검토를 했고 통과도 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시각과 자세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우리가 임대인 중심의 시각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 중심의 법제도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보면 아직도 임차인들에게는 많이 불리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저도 30대 초반에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실제 손해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이면서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계시기 때문에 참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 중인 재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3일 날 모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서울 동작구에 전세사기 피해가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모 건설업체가 무려 32채의 다가구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문자를 보내 왔는데 정말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회사의 32채의 건축물 가운데에서 현재 3개까지는 문제가 돼 있는 게 확인됐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찾다 보니 그 회사가 지은 건물 32개 가운데서 5개가 현재 문제가 되어서 진행 중이다, 그러면 남은 게 27채가 남았지요. 대강 한 20여 가구 정도 안팎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회사가 건물을 짓고 그 회사의 대표의 부인 혹은 임원 이런 분들이 임대인으로 되어서 그분들은 파산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들은 손해를 보는, 여기에는 아주 젊은 대학생들이 있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머지 27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한 군데는, 이게 푸른주택 1차 2차가 있는데 2차에서 먼저 터져서 1차에 있는 주민들에게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확인해 달라’라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그 나머지 현재 27채, 사고가 터질 것이 뻔히 보이는 27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거나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기왕 위원 그러시면 박병석 단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확인 못 했습니다.

○북기왕 위원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돼요? 얼마나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방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맞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 27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난 사람이 혹시 우리 이웃도 손해날까 봐 포스트잇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방식으로 알려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국토부에서 그런 예방 조치를 취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는 없겠습니까?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게 발생해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정부 센터에서 피해자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된 분들을 국토교통부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아주 막 현장에서 발생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뭘 조치를 하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절실함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서른……

○복기왕 위원 공감을 하셨다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공감은 했습니다. 공감은 했는데……

○복기왕 위원 공감을 하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27개 그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동작구에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건축물이 다세대인가요?

○복기왕 위원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 경고를 하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드시 수립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 피해가 다 발생되고 나면 피해자 특별법의 사기 피해자가 되면 우리 재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래서 이 사례에서 적극행정을 한번 보여 달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예방 대책의 범위에 정보 제공 또 이런 부분 말고도 몸으로 뛰는 행동, 행정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 사례를 한번 모범 사례로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작구라 그러면 동작구청장님도 자기 관내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작구청장님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한번 액션을 하는 쪽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일선

행정 경험도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 그런 단체장님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연대하는, 이게 중앙부처만의 일이고 자치단체장들은 ‘내 관내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단체장님들도 많이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짧게만……

○위원장 맹성규 아니, 하십시오.

○복기왕 위원 국토부에서 서울시청이나 동작구청에 그것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혹은 연락만 가더라도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바짝 줄아 가지고 뚝니다. 그러면 정보가 금방 취합돼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라고 하면 일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지방공무원들은요 ‘야, 이것 큰일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예방적으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첫 사례로 지역과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재차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피해가 발생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예방으로 막을 게 있다고. 예방으로 막을 게 있어요. 피해가 발생을 안 했는데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해서 막을 게 있고, 지금 이 경우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카테고리 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지금 피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방하는 것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어차피 제도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복기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앙부처로서 법과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지자체와의 협업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구면 동작구에 거기도 주택과가 있거나 무슨 복지과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에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좋은데 담당 과,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동작구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몇 명인지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정치와 국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장마철에 비만 오면 잠을 못 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반지하에 사는 전국의 32만 7000가구인데요. 장관님, 반지하 가구, 세대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약 2주 전에 관악구에 다녀왔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해 보니까 장관께서 그전에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앞으로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신림동 참사가 22년에 일어났었는데 그런 참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난 2년간 몇 세대나 이주를 지원하셨습니까? 그런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공매입을 한 것이 있고요 주거 상황이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 주거 상황 실적이 23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의 6444호를 주거 상황을 했고요. 그중에 서울시가 3636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 실적이 3290가구,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따뜻하고 촘촘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반지하 주택 매입 현황을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PPT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LH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0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특히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데 지난해 LH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예산 산정 근거 같은 게 마련되지 않아서 LH공사가 전 분야에 있어서 착공이고 매입이고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아마 순살 아파트 사건 이런 게 생기면서 LH가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여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지금 전국의 32만 7000가구 중에서 그나마 정부가 최소한의 장마철 수해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물막이 설치하는 겁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물막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서울시의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중의 거의 1만 가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비만 오면 당장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데 과연 이런 정

책을 놓고 어떻게 따뜻하고 촘촘하게 주거취약층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너무 비정한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말로만 전시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이 의문이 좀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2만 4842가구 중에서도 뒤집어서 보면 61%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연희 위원 아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서 이게 부동산 폭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안 갖고 계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부동산 폭등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신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빗내서 집 사라. 두 번째,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요. 세 번째, 공급이 불안정하고 불균형하고 부족해지는 이 세 가지 신호가 가게 되면, 특히 수도권은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당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요자들은 주택을 매입할 시기다 해서 빗을 내서라도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장관님께서도 주택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 계획해서 공급까지 가는 데 보통 육칠 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22년부터 주택공급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과열 상태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동산 폭탄이 터지는 시기는 삼사 년 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결국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폭탄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국토부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최소한 공급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 정말 충정 어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진심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취임 후부터 저희도 이런 지표상의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급 상황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외에 금리라든지 유동성 관리 문제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주택시장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또 신경 써서 전 부처가, 심지어 국회에까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부산 연제 김희정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급발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고가 늘어나는데 향후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없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논쟁의 여지는 더 커진다고 보는 이유가 자동차는 점점 전자화되고 있고 운전자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원인에서의 규명이 조금 더 장기 미제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사전 예방으로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왔고 사후 원인 규명 관련해서는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은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페달 블랙박스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제조사에 권고를 해 왔으나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장관께서는 권고 방식을 택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특별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를 하고 또 수요자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김희정 위원** 어느 쪽에서 요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수요자 측에서……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는 것 중에 제조사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일단 리콜 같은 것을 당했을 때 정부가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자동차 제조사하고 관계가 없지만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게 달려 있을 경우에 보험금에서 할인을 받도록 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답은 제조사가 아니라 차주 문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것은 차주와 보험사의 문제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리콜의 혜택을 준다는 게 어떤 적극적인 권고가 되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작 결함이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징금의 감경을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달고 나온 차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으로 리콜이 있어도 이런 적용을 하겠단 말씀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권고는 없었고 내일 제조사들과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내일 제조사들하고 일단 한번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희정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방적인 것과 원인 규명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설계 변경이 필요하니까,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설계 변경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장관님, 아까 장관님 본인이 자기 자동차에 달겠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본인 자동차 설계 변경하고 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지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은 필요……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김희정 위원** 당신 차량을 설계 변경 없이 지금 달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물론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할 건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시는지를 제가 확인해 본……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지금 국토부의 입장으로 해서 제조사가 설계 변경 등의 이유를 대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답변 중에는 ‘나는 달겠다’, 그러면 설계 변경 없이 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것은 아마 신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소나타 같은 것을 설계해 놔는데 거기다가 달고 나오는 것을 의무화하면 기존의 소나타 설계를 고쳐야 된다 그런 뜻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후에 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설계 변경하는 것 없이 아마 기계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희정 위원** 사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설계 변경이.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의무 사항을 두면 설계 변경을 의무적으로 새로 해야 되겠지요, 아마.

○**김희정 위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기술입니까, 있는 기술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 변경 필요 없고 손쉽게 그냥, 인터넷에 봤더니 지금 3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해야 되나, 제조사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대답을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서 제조사에 권고를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장관님 답변은 ‘차주들에게 보험료 혜택으로’ 이렇게 혼재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후 규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마무리하세요.

○김희정 위원 사전 관련해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저희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지요, 오늘은 1월부터 조사하고 있다라고만 보고를 하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입니다.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오늘 업무보고상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 안전도를 강화하겠다고 24년 1월부터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오조작 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R&D 기획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오조작 방지 장치를 저희가 내년부터 달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어떤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예를 들어서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희정 위원 앞서 장관님께 질문드렸듯이 제조사와 차주 각각 나눠서 어떤 인센티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일단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것은 실수로 액셀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가 될 텐데요. 그것을 다는 것은 오조작 방지 장치를 제작사에서 직접 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는 게 임의로 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의무화 대상도 일반 영업 차량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업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 차량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활성화를 할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여러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급발진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방과 관련해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이 있고, 비상자동제동장치와 관련된 게 있고, 제조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차주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무화할 건지 인센티브가 있을지, 역시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EDR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페달 블랙박스도 할 건지, 역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각각의 인센티브가 뭔지, 의무화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이것도 해 보고 있습니다. 저것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방과 책임 소재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기술과 관련해서 언제쯤이면 정부의 종합적인 결과 보고를 받아 볼 수 있고 준비하고 있는 법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원인 규명과 예방책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서 각각의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청량리에서 부산의 부전역까지 중앙선 KTX-이음이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는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오 위원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윤종오 위원 현재 우리 KTX 울산역은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내와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1시간 또 새벽 시간에 가도 거의 30분 이상 걸리는데요.

저희 지역에 가면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사거리마다 엄청나게 사실은 걸려 있는데요, 또 10만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고. 제가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울산 북구 북울산역에 정차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요.

울산 북구는 그래도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좀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또 지금 북울산역 인근에 송정지구라는 신도시가 들어와 있고 또 역 바로 앞이 창평동 지역이라는 곳인데 100만여 평 도시개발계획도 수립되고 있는 단계고 인근에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매곡산업단지 또 남경주하고 붙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외동공단, 문산공단이 인접해 있어 산업 수요도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울산 북구가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혜 기업이 한 202개사에 한 9만 4000여 명이 된다, 수혜 인구도 33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태화강역하고 가까운 게 좀 걱정이기는 한데요. 생활권은 사실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정차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정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장관님, 어떻게 하나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코레일이 기본적인 스탠스를 정해서 개통 2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하는 원칙이 이용 수요 또 열차 운영의 효율성 또 선로 용량 이런 기술적인, 기계적인, 경제적인 요인들이 주된 요인인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지역별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살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탈 수 있는 사람 정말 많고 기차역도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그냥 기차 지나갈 것 같으면 철로 뭐하러 놓습니까? 어떤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쿠광,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입차시간 공유해 주세요’ ‘출차해 주세요’ ‘가실 분이 슬기 님밖에 없습니다’ ‘한 시간은 너무 기네요. 40분 안에 끊어 주세요’ 이런 업무 지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쿠광CLS 직원이 사실 지시하신 거거든요. 책임은 대리점이 다 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떠 있는 겁니까?

보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금 개처럼 뛰고 있다는데 장관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가슴이 쩡합니다.

○윤종오 위원 쩡하지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분이 5월 말에 새벽배송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4명이나 있고 나이가 이제 41살입니다.

지금 평상시 노동시간이 평균 한 63시간 정도 이상 되고요. 이걸 전부 다 심야에만 하기 때문에 할증을 감안한다면 거의 77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km 되는 거리인데 하루에 세 번 정도를 무조건 왕복을 해야 되고요. 아침 7시까지 무조건 배송을 완료해야 됩니다. 로켓배송이라고 하는데 로켓배송이 사람 잡습니다.

저도 저녁에 한 번 시켰는데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물건이 그렇게 새벽까지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에 의해 가지고 무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실제……

시간 다 됐습니까?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하세요.

○윤종오 위원 실제로는 모든 작업을 이렇게 본사에서 업무 지시를 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은 대리점한테 다 맡기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쿠광은 지난번 4년 전에 사회적 합의를 할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오 위원 그때 본인들은 주 5일도 근무한다, 40시간 근무한다, 다른 택배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건이 훨씬 더 좋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운영되는 내막을 보면 그때 사회적 합의보다는 완전하게 후퇴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에 쿠광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우리

가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정말 트랜지셔널(transitional)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찰적인,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담당하는 물류산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려 가지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배현장 여러 군데를 사실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택배현장이 일단 천막, 막 구조로 그냥 가설건축물로 그냥 막 지어 놓은 거예요. 물론 택배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택배산업이 궤도 위에 올라와 있고 아주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건물도 좀 제대로 된 건물 지어서, 지금 환기 문제라든지 폭염 폭우 폭설 그리고 추울 때 더울 때에 따른 대책이 거의 없이 대리점한테 그냥 맡기고 자기들 책임 안 지는 구조거든요.

지금 혹서기인데도 불구하고 얼음물 한 병 주더라고요. 한 병 더 줄 수 없냐 그러니까 본사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것 한 병 하면 얼음물 한 20~30분 있으면 다 녹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할 정도로 본사와 대리점이 완전하게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과로사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택배산업이 빨리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제도적인 게 덜 맞춰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좀 직시하고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 충심 어린 충고 잘 받들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경기 광주시율의 안태준입니다.

장관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이견 장관님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점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전번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얘기를 하셔요. 빌라 대신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고 교통 등 입지 여건이 개선됐다, 여기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신 게 초저금리 전세대출에 따른 서민들의 전세 과소비 그다음에 임대차 2법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 만기에 따른 임대료 4년 치 상승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전셋값이 오르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전셋값은 주택값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이나 민간이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민간 같은 경우는 PF 금리 엄청나게 오르고 PF 안 되고 공공도 LH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의 부족에 따른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오르는 것은 지금 저희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 2월 이후로 차수로는 11회 차 그다음에 달수로는 한 17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한 9개월 정도 동결 중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 22년 이후로 주택값도 계속 떨어지고 전셋값도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떨어져 온 상태에서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계약갱신 건수가 별로 없었다’, 주택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갱신을 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데 옮겨 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차 2법의 취지가 주거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장관님과는 의견이 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가격이 오를 때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이지 내릴 때는 작동을 안 합니다. 이제 정확히 작동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잠깐 드리겠고요. 그건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요즘에 보면 노령 운전 애기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그런 의심 신고를 도대체 어떤 분들이 많이 하나 봤더니 60대가 많기는 많습시다, 30.8%, 50대도 27.3%. 그래서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가 56.8%입니다.

이런 걸 보면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잦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작년 국감 이후에 국토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EDR 확대한다 이렇게 냈는데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EDR을 보면 사고기록장치에 별 땡땡이(*) 치고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Event Data Recorder)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라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밑의 개정안에 보면 제동 페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동압력값 이것은 선택항목으로 또 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오작동을 했냐 다른 걸 밟았냐 이런 얘기보다 요즘에는 전기차도 있고, 작동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고 여러 차들이 있는데 이게 그분들이 신고한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액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았는데 듣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것을 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급발진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혹시 갈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다 빠져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동압력값 이게 휘발유차나 경유차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차가 오작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EDR값을 저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반도체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구조변경이나 뭐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조차 EDR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왜 제동압력값은 빼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제조사가 책임질 만한 제조사의 과실로 나타날 만한 것들은 다 빠져 있는지, 내일 또 만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받기는 EDR값의 항목을 늘린다고만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개선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로 양꼬는 다 빼고 늘려 봐야 별 영양가가 없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따져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세가격 부분은 저도 근본적으로 생각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주택가격 결정의 기본요소이고 수급 중에 공급 부분은 실제로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수요 부분은 탄력적입니다. 굉장히 탄력적이라 특히 금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전월세 2법이 부추겼느냐 안 부추겼느냐 하는 것은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격변동기에 진폭을 늘리는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상승기에 그 안에 들어온 소비자들한테는 4년간의 보호막은 쳐 줄 수는 있지만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태준 위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제 생각은 전셋값이라는 게 주택값이라고 하는 상승 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값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갑자기 올리고 싶어도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논쟁거리는 있지만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DR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작동원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EDR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 꼼꼼하게 따져서, 왜 그런지 저도 말씀 듣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거나, 이것 사고를 알려고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급발진이 의심될 수도 있잖아요, 전자장치라는 게 오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빠져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대전 중구 박용갑입니다.

장관님, 하루 종일 힘드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니, 괜찮습니다.

○박용갑 위원 아까 본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반지하 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서울에 반지하가……

○박용갑 위원 약 한 24만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체 32만 가구인데요.

○박용갑 위원 32만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국적으로, 그중에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는데 여기는 서울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또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니까 2718호, 2022년부터 매입을 했어요. 국토부는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SH나 LH가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재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LH공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용갑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관님께서 2월 8일 날 구로동 소재에 있는 청년창업공간에 가서서 말씀하신 것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용갑 위원 반지하 주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매입한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닙니다. 6월 24일 날 매입 공고를 LH가 또 했고요. 작년에 LH가 1채도 못 샀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인정을 했고 그게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못 샀다라고……

○박용갑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매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현재 매입 공고 6월 24일에 하고 상시접수 중에 있습니다. 곧 실적이 나올……

○박용갑 위원 장관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LH가 관리하고 있는 반지하 이것을 다 전수 매입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전수 매입 얘기는 그분들을 전부 다 위층으로 올려 보냈다는 말씀, 6400명……

○박용갑 위원 이 자료에 보면 LH가 관리하는 1810가구 중에서 651가구만 매입을 했고 나머지 1152가구는 지금 그대로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이 좀

잘못돼서 이것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LH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다 이전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다시 한번 챙겨봐서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다시 답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하고 위원님이 가진 자료하고 뭔가 조금 수치의 인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용갑 위원 또 저희 지역 얘기인데 성심당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합니다.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님하고 만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용갑 위원 임대료 문제 때문에 만나셨는데 사실 지금 성심당이 대전역 2층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지금 몇 차까지 무산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그 자리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요 다른 일로 만나서 제가……

○박용갑 위원 지금 2개월 동안에 다섯 번 유찰이 됐어요. 1년 임대료가 4억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박용갑 위원 4억인데 성심당 외에는 거기 입주할 입주자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물론 코레일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지만 이런 문제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코레일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 향토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하기관 업무에 대해서 장관이 어느 정도 지시나 할 수 있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전지역 지역정서를 코레일 측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이, 지금 다섯 번이나 유찰이 됐다면 사실 거기에 들어올 만한 어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체가 없다는 얘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아마 코레일도 그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성심당이 어차피 이 정도로 매출도 올리고 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관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용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분야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1대 때는 양평을 굉장히 관심 있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원래 기후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HUG, KIND 같은 산하기관들이 그 유명한 RE100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 100% 선언했는데 그것도 제가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서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고요. 현재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라는 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오늘 이 30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뭘 하고 있다는 내용은 한 줄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이게 제가 눈이 나빠서 못 찾은 걸까요, 아니면 중요도가 너무 떨어져서 뻔 걸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녹색인증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탄소 배출의 절반 이상을 국토부가 담당합니다.

사는 집, 건물에서 나오는 게 3분의 1이고 또 탈것에서 나오는 게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공장보다도, 소위 산자부장관보다도 국토부장관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소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별별 내용이 다 있는 30페이지짜리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말 송구합니다마는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 있으신 내용을 못 쓰고 다른 내용을 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업무도 저희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사실 내용을 모르실까 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탄소중립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부처를 중요도 기준으로 줄을 세워 본다고 했을 때 아마 산업부 다음이 국토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을 국토부가 전체 정책을 관장하는데 건물 부문이 전기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24% 정도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이니까 엄청난 양이지요. 그리고 수송 부문이 한 13~14% 정도 되는데 이 두 부문을 합치면 한 38%,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거니까요 진짜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리고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있지요, 부문별로. 물어볼 것 아닙니다. 이런 숫자를 외우실 수 없다라고 저도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건물 부문이 2018년 대비해서 32%를 감축해야 되고요 수송은 37%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배출하던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것을 3분의 1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진짜 만만한 목표가 아닌 거지요. 총력을 다해서 감축정책을 죽을 등 살 등 펴야지 달성할까 말까 하는 어려운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어떤 정책 중점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우선 건축 부문은 녹색인증제도 또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수송 부문은 우선 대중교통 활성화가 제일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K-패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K-패스가 200만 장이 발급됩니다. 지금 곧, 늘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도자료에 반드시 CO₂ 감축량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소영 위원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다음번 정기국회 때 업무보고에는 저는 그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배출 부문 중에서 유일하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분야가 있거든요. 어딘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이소영 위원 건물 부문입니다. 산업이니 발전이니 이런 데서는 그래도 조금씩 줄어 들고 있는데요 건물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토부가 일 열심히 안 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유예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이소영 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유예하셨습니다. 공공건물도 지금 겨우 5등급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등급기준 강화할 계획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현재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아는 바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게 아마 개념을 잘 아시겠지만 배출량을 거의 0에 가깝게 극단적으로 줄이고요 도저히 기술적·경제적으로 줄일 수 없는 부분은 나무 심어서 흡수하는 게 탄소중립이거든요. 그러면 2050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25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렇지요, 25년 남았지요. 지금 지어지는 건물은 2050년에도 사용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게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토부가 이 시대적인 생존의 과제에 있어서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관심과 노력을 촉구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저희가 뭔가 실적을 내지 않으면 국제무역 장벽에 걸린다든지 국가의, 이것도 하나의 걸다리 무슨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생존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준호 위원 장관님,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질문지 보니까 제가 간사님들 빼고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님께서 임대차 2법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타이틀만 봤습니다.

○정준호 위원 동의하십니까, 즉시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은 말씀드렸고요. 진폭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즉시 폐지에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즉시 폐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들까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가격변동기에 진폭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을 하시든지 데이터나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실증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모으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저희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 중에, 국토연구원에서 합시다라는 제가 실증 데이터를 좀 모아서 실증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언젠가 한번 이 위원회에서……

○정준호 위원 장관님,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인데 임대차법이나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저희 당에서 엄청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도입을 한 제도들인데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 방식을 보면 전세사기 입법청문회 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안 해서 실태조사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고.

아까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가지고 개정이 돼 2024년 3월 말부터 시작이 된, 감면규정 확대가 된 그 법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이 얼마 정도나 건힐 것 같냐라고 물어본 부분에 그 부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실증된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하자라고 부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6월 달에 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2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데이터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선행을 하신 다음에 저희 당에서 어렵게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으시는 게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개정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열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티로폼 얘기인데요. 이 시장은 약 1조 5000억 규모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약 육칠천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국토부의 녹장 행정과 대기업 눈치보기 행정 때문에 생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예전에 21대 때 심상정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발단은 2019년 국토부가 국가기술표준원 KS기준을 변경하면서 건축물 설계기준에 탄소중립, 녹색건축물 지원을 위해서 스티로폼 열전도도를 초기값뿐만 아니라 6개월 후의 값인 장기값도 상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고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2019년에 국토부가 이런 약속한 것은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아마……

○윤종군 위원 잘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윤종군 위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발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게 또 빠졌어요. 업계에서는 약 2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모 대기업의 로비 때문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어제 나온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니까 7월 25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인데 제가 오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니 이번에는 꼭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전도도가 더 좋은 중소기업 단열재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열전도도가 하락하는 대기업 제품만 성능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준 고시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니까?

정부 부처가 약속을 하고도 5년째 이행하지 않는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건축물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잘 검토해서 결론 나기 전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저는 만일 포함이 안 되면 끝까지 대기업과의 유착,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하고 파헤치겠습니다.

장관님, 경기도에 철도역·전철역이 없는 시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안성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종균 위원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 안성이 그렇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와 전철역이 없고 광역버스로 작년엔 처음 운행을 시작했을 정도로 철도·전철, 광역교통의 완전 소외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주민으로서 광역교통분담금은 아파트 살 때마다 다른 지역처럼 수십 년 꼬박꼬박 내 왔습니다. 그래서 안성을 동서로 관통하는 유일한 주 도로인 38국도 통행이 안성시민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수년째 지연되고 있어서 안성시민이 출퇴근 때마다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에 안 살고 수도권 외곽에 살면 교통이라도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7km 구간인데 애초에 3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것이 지금 3배를 넘어서, 3배 가까이 돼서 8년째 미완공입니다. 세 차례 공사업체가 타절되면서 지금도 언제 완공될지 확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경부고속도로 420km 완공하는 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몇 년 걸렸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클쥬요.

○윤종균 위원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3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것도 50년,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3.7km 구간을 8년째 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적인 건설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도대체 믿겨지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를 행정·정치가 조금 잘못해서, 조금 게을러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안성시민들께 교통정체 만행을 저질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 주십시오. 공사 조금 빨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인도나 이런 주변 정비는 좀 늦더라도 연말까지 차량 소통이라도 가능하게 공사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적극적으로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차량 소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장관님.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또한 경부축과 강원 영남 자원선 중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도 노선이 개설되다 보니 용인 중동부, 안성, 음성, 진천, 청주 등 중부내륙 지역이 철도 교통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셔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B/C만 따지면 인구가 많은 경부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인구 60만 평택에는 총 일고여덟 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20만 안성은 1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따져도 2개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1개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신경 써 주실 겁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안성 지역에 다른 지역하고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38호선 공사 구간은 최종 준공은 앞으로 한 1년 더 걸린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량 소통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공사의 구간이라든지 선후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지혜를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올해 말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장관님, 철도 꼭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안성 철도를 개막시킨 주무장관님으로 대대로 기록하고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km도 안 되는데 8년 반은 이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몇 번 나고……

○위원장 맹성규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시공사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번……

○위원장 맹성규 아니, 업체 부도가 났다고 8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금년 말에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사 준공은 내년 말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까 공항 같은 것들도 사실은 공사가 모든 게 다 끝나는 준공하고 주기능이, 그러니까 아까 개항이라든지 이런 주기능이 완성되는 것과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맹성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윤종균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차 다니게 되면 저도 그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만금개발청장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나오셔서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제가 남은 시간 이따가 드릴 테니까 국회에 하고 싶은 얘기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왜 다시 국회로 온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권영진 위원 잘 모르시지요?

저는 지방 살리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정무부시장하고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했습니다. 하고, 대구시장을 제가 8년 하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이번에 다시 됐는데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어디서 삶의 첫 터전을 갖든지 기회가 균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서울 수도권 공화국이 되면 우리가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행복한 국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22대 국회가 정말 지방을 살리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혁신도시가 어떻든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들 가 보면 당초의 취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진 위원 지금 특히 많은 곳이요 김천혁신도시 그다음에 전남·광주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는 공실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모도시와의 관계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3개는 외곽에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가를 또 너무나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 텅텅 비는 겁니다.

장관님, 11월 달 12월 달 되면 1기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그러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권영진 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혁신도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외곽의 그린벨트 풀어서 편하게 널찍한 데에 그렇게 자리 잡지 마시고 도심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도심으로 보면 대학들의 빈 캠퍼스, 유휴 캠퍼스도 있을 거고요. 너무 넓게 넓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콤팩트시티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

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양한 방안을 놓고, 아마 전 국민적인 오픈 디베이트(open debate)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요. 그걸 그냥 추상적인 주의나 주장으로 논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용역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내고 그것을 놓고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안 청장님.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예.

○권영진 위원 새만금 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새만금이 전북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 희망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허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영진 위원 다 되겠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예.

○권영진 위원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김형렬 청장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저도 새만금…… 참, 새만금이 아니고 행복청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은 지금 한 17년 됐는데 1차 목표인 44개 중앙 행정부처의 이전이 완료가 됐고 다행히 국회에서 국회세종 의사당 이전을 작년 10월 달에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세종 의사당이라든지 이런 국가 중추시설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공간으로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감사합니다.

○문진석 위원 장관님, 급발진 문제는 사고가 터질 때만 국토부에서 뭔가 의견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2년 전에도 사실 원희룡 장관 시절에도 EDR이라든가 페달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안도 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국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장관님이 좀 책임지고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도 좀 내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 진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소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진석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위 30년 하지만 자동차 문제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한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의 관심이 안전과 이런 데 많이 옮겨 가 있다 이런 정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각별히 더 챙겨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고맙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장관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방이라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또 실질적인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언제 법안을 낼 생각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다음 주 초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내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다음 주 초에 발표하시는데 아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요일 날 피해자 대표들하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 관계자들하고 같이 면담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까지 끝내고 그분들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초에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잠깐 좀 우려가 들기는 하는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저번에 장관님하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회수 또 주거안정 두 가지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문진석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 제대로 반영한 그런 법안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위원 저희 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협조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협조가 아니고 제 일입니다. 위원님도 협조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좀 기대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게 진짜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총리님이나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관님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어제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뭐 협의체 이런 것은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아까 소위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현금성 지원도 고민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소위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위 안 들어가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까? 논란이 생겨서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법안을 내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집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해서 돈을 잃어 먹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집이 주거가 불안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안정을 회복해 드리는 것이 기본 스탠스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덧붙여서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으면 지원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주거안정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갈 수 없는 곳에 주거가 마련돼도 그것도 곤란한 일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윤종군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와 관련해서인데요 통상적으로 도로공사가 갑이라면 실시설계 용역업체들은 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갑인 도로공사가 을인 용역업체들을 불러서 연례 조찬 간담회를 수년간 열어 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갑이 을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주문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서 2008년 이후에 아홉 차례 열렸다고 하는데 그간 열린 연례 조찬 간담회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주요 논의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연례 조찬 간담회가 열리면 도로공사가 용역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용역업체들이 도로공사 출신 전관 창구로도 이용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이외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없다면 도로공사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를 왜 취업제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지 LH나 국가철도공단 사례와 대비해서 그 이유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지금 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보내 주시는데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간부들만 돼 있고 2급,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정리를 해 주서 가지고 17일 날 우리가 산하기관 감사할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합니다, 질의하셔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셔도 되는데요.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위는 22대 국회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새만금청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문제, 급발진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 노후도시 재개발 문제 그리고 주택 공급과 전세가격 상승 문제 등 다양한 민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권영세 권영진 김기표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염태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청가 위원(1인)

정점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장지원

입법심의관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1차관 진현환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대변인 박지홍

국토정책관 안세창

도시정책관 정우진

종합교통정책관 박정수

항공정책관 김영국

공항정책관 이상일

철도안전정책관 정의경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박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 김복환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장 김정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상임위원 김수상
 광역교통정책국장 이정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정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김형렬
 차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욱
 도시계획국장 김홍락
 시설사업국장 최형욱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경안
 차장 윤순희
 기획조정관 정인권
 개발전략국장 박준형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4)

7월 3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이상 6건 7월 4일 회부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이상 4건 7월 5일 회부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5.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7)

이상 10건 7월 8일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2)

이상 4건 7월 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7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7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2024. 7. 8.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이상 5건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